

2015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발간에 즈음하여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분야 정책수립에 기여를 해왔으며, 나아가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공간정책,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국민행복 향상, 국토자원 보전·관리 등의 책무를 다하고, 국책연구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개발’을 연구사업 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총 244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미래지향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창출’의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부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을 위해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법정 도시 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을 위해,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정책지원

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창출을 위해 'T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열망으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에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며 국민지향의 연구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국민행복을 향상시키는 정책들로 직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원장 김 동 주

차례

CHAPTER 01

연구원소개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008
2. 연혁	009
3. 조직 및 인원	010
4. 2015년도 예산현황	011

CHAPTER 02

그래픽으로 보는 2015년 KRIHS

1. 국정과제 관련 연구사업	014
2. 협동연구 수행성과	014
3. 국가기관의 정책요청 대응실적	015
4.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정도	015
5.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016
6. 국내 정책연구네트워크 개최실적과 성과	016
7. 공공데이터 개방실적	017
8. 국제학술교류 실적	017
9. 연구성과물 배포실적	018
10. 뉴스레터 제공서비스 실적	018
11. 연구성과 확산 행사개최 실적	019
12. MOU 체결실적	019

CHAPTER
03

주요 연구성과

1. 2015년도 연구사업 및 2016년도 연구방향	023
2. 2015년도 주요 연구성과	027
1)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028
2) 도시연구본부	048
3) 주택 · 토지연구본부	062
4) 국토인프라연구본부	076
5) 국토정보연구본부	088
3. 색인	095

CHAPTER
04

연구지원활동

1. 주요 행사	100
2. 글로벌 협력	104
1) 해외학술교류	104
2) 연수프로그램	107
3) 글로벌개발협력 센터 활동	108
3. 발간물	110
1) 국토	110
2) 국토연구	116
3) 국토정책 Brief	117
4)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119
5) 도로정책 Brief	120
6) 건설경제	122
7) Space & Environment	123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

CHAPTER

01

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2. 연혁
3. 조직 및 인원
4. 2015년도 예산현황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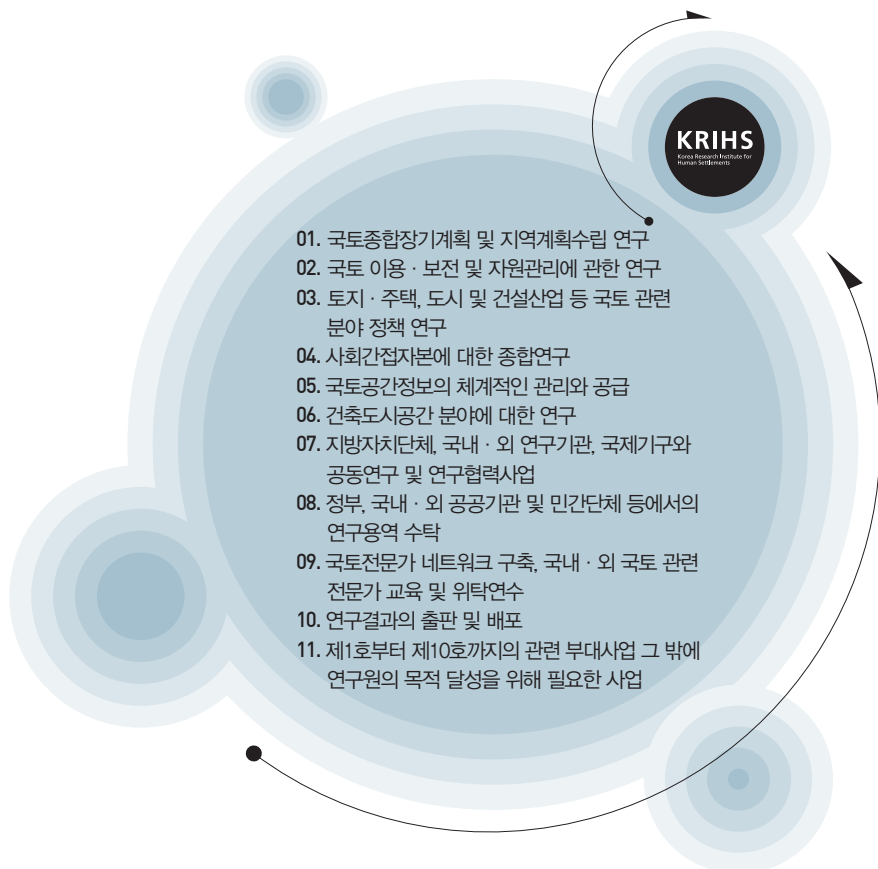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연혁

1970

- 78. 04. 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 78. 09. 13 초대 노용희 원장 취임
- 78. 10. 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설립자: 대통령)
- 78. 12. 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법률 제3140호)

1980

- 81. 06. 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 통합(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 81. 12. 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 84. 12. 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 88. 08. 09 제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90

- 92. 05. 0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93. 03. 30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 93. 09. 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 94. 04. 27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안양시 평촌 소재)
- 97. 03. 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 97. 07. 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 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99. 12. 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2000

- 02. 05. 10 2001년도 경제사회연구회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2. 12. 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 05. 05. 26 '경제사회연구회 2004년도 평가결과' 최우수연구기관상 2회 연속 수상
- 05. 12. 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 06. 05. 0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6. 07. 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 선정
- 06. 12. 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07. 06. 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07. 07. 17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 08. 04. 07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8. 04. 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 08. 06. 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 08. 10. 01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09. 05. 0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0

- 10. 02. 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 10. 12. 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설립
- 11. 06. 18 제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 11. 12. 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 · 출연 · 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 12. 08. 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13. 08. 19 제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 15. 06. 30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원장	1명	현원	165명
연구직	박사 99 석사 41 140명	관리·전문직	관리직 19 전문직 5 24명

보직자 현황

원장	김 동 주
부원장	김 종 원
본부장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이 상 준
도시연구본부	이 용 우
주택 · 토지연구본부	김 성 일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 호 정
국토정보연구본부	김 미 정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 일 호
기획경영본부	이 원 섭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김 대 익

4. 2015년도 예산현황

예산현황

2015 수입

1. 정부출연금	19,330
2. 자체수입	16,767
3. 청사매각 등	33,428

69,525

2015 지출

(단위 : 백만 원)

1. 인건비	15,782
2. 연구사업비	19,130
3. 경상운영비	1,331
4. 시설비 등	33,282

69,525

※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외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

CHAPTER

02

그래픽으로 보는 2015년 KRIH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그래픽으로 보는 2015년 KRIHS

국정과제 관련 연구사업

2015년도 국정과제 관련 연구사업은 총 176건(예산 326억 원, 연인원 974명)으로 2014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시 국가정책지원성과 및 국정과제 관련성을 우선검토하였다.



국정과제 과제수

176

기본연구

31

수시연구

24

일반연구

3

수탁연구

118



국정과제 인원(명)

974

기본연구

144

수시연구

47

일반연구

28

수탁연구

755



수행과제 예산(백만 원)

32,607

기본연구

1,685

수시연구

315

일반연구

2,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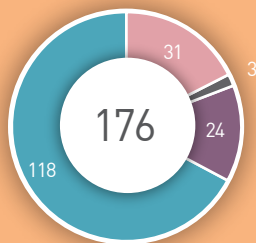
수탁연구

28,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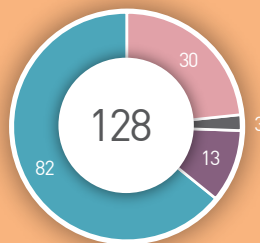
협동연구 수행성과

연구성과의 정책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내용의 시너지를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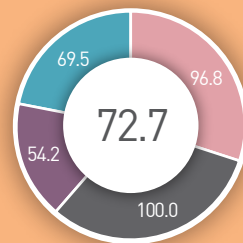
- 기본연구과제
- 일반연구과제
- 수시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총과제수(건)



협동연구 수행과제수(건)



협동연구 수행과제 비율(%)

국가기관의 정책요청 대응실적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의 정책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고객의 긴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64건



국토분야

7건



도시분야

4건



주택분야

27건



인프라분야

19건



공간정보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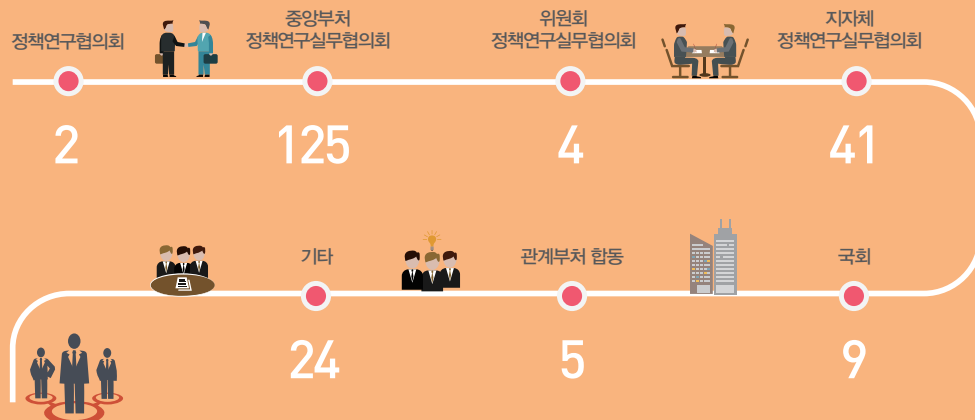
2건



글로벌분야

5건

유관 정부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 정도



그래픽으로 보는 2015년 KRIHS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국토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 연간 7만 1,753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하고 있다. OAK 리포지터리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의 해외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정책연구네트워크 개최실적과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실적



국제학술교류 실적



그래픽으로 보는 2015년 KRIHS

연구성과물 배포실적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7만 1,421건의 연구성과물을 배포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7만 1,421건

배포처 6,337

행정기관 2,444

공공기관 493

대학,
연구기관 등 2,054

공공도서관 838

해외 634



배포부수 71,421

연구보고서 5,300

정기간행물 64,488

비정기간행물 485

기타 간행물 1,148

뉴스레터 제공서비스 실적

발송건수

KRIHS
뉴스레터 235,819

UBIN
뉴스레터 52,092

도로정책
뉴스레터 125,171



NEWSLETTER

발송횟수

KRIHS
뉴스레터 48회

UBIN
뉴스레터 12회

도로정책
뉴스레터 12회

연구성과 확산 행사개최 실적

국토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연구내용에 수렴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원내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미나, 정책포럼 등 국내 행사가 47회, 국제행사가 16회 개최되었다.

국내 행사 **47회**

국제 행사 **16회**



MOU 체결실적

국토연구원은 2015년 국토분야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 연구기관 14곳, 해외기관 4곳과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기관 **14곳**

해외기관 **4곳**



지자체
10



연구기관
2



공공기관
2



해외기관
2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

CHAPTER

03

주요 연구성과

1. 2015년도 연구사업 및
2016년도 연구방향
2. 2015년도 주요 연구성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2015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5년도에는 연구사업목표를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개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정책 지원’, ‘미래지향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 창출’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과제 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등 34건의 기본연구과제,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등 24건의 수시연구과제,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등 186건의 수탁과제 등 총 24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34건, 수시연구과제 24건 및 수탁연구과제 115건을 완료하였고, 수탁연구과제 중 71건은 2016년으로 이월되었다.

2015년도에는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연구본부별로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종합계획이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에서는 지방중소도시 대다수가 인구변화 및 고령화, 재정력, 소득수준 등 내부속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도시 체계에서의 위상 등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여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을 논의하였고, 정책적 지향점 및 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종합계획이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지불능력을 감안할 때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거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주택정책을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안정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지역밀착형 정책지원도구로서 공간정보의 활용 의의를 정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활용모델을 발굴하여 실증적 지역밀착형 정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6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국민행복을 위한 국토정책의 실천 및 모니터링'으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실천, 둘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지원, 셋째, 미래지향의 융복합형 정책의 성과 확산이다. 2016년도에도 이러한 세부 연구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의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16년도 중점연구과제

2016년도 수행과제 중 국정기조와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는 국토계획 분야에 적용가능한 포용적 국토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요소를 분석한 뒤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도시의 기초현황자료를 구축하고, 북한 도시환경에 대한 부문별 진단을 수행하여 통일시대 북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간 교통수요 추정 연구'는 지역간 교통수요추정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고속도로 통행데이터를 이용한 수요량 추정방안을 정립한 뒤, 고속도로 통행데이터의 활용방안 및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연구'는 초연결 시대의 공간정보인프라의 위상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초연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초연결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보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국토·지역정책, 국토계획평가, 지역경제, 산업입지, 국토 환경 및 수자원, 한반도·동북아 등 국토계획과 국토 및 지역발전 관련 장단기 정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국토·지역정책, 수도권정책 및 계획, 국토환경 및 수자원 관련 연구, 둘째,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체계, 미래국토 및 국토 모니터링 관련 연구, 셋째, 지역경제분석, 공간계량분석, 국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관련 연구, 넷째, 국가 산업입지정책 및 계획, 산업입지 수요분석, 지역산업 입지계획 관련 연구, 다섯째, 통일한반도 및 북한지역계획, 동북아 공간전략, 접경지역 개발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

이상준 | 선임연구위원 |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공학 박사

김선희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

권영섭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장철순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김광익 | 연구위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박사

김천규 | 연구위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자원 및 환경경제) 박사

문정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류승한 | 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차미숙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박태선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양진홍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안홍기 |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순자 | 연구위원 | 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변필성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도시계획 부전공) 박사

강호제 | 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김진범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서연미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이미영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김동한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계획학 박사

박경현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하수정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한우석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수자원) 박사

장은교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

민성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남기찬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이현주 | 책임연구위원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 박사

정우성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박정일 | 책임연구위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홍사흠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강민조 | 책임연구위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이윤석 | 연구원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석사

차은혜 | 연구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석사

유현아 | 연구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교육학 석사

동북아, 통일한반도

환경계획, 갈등관리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산업입지, 지역계획

도시정책, 지역정책

동북아, 통일한반도, 중국지역연구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산업입지, 경제지리

지역정책, 지역계획

댐, 하천, 수자원정책

국토계획,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지역계획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도시모형, 공간분석

도시지리, 지역정책

지역경제, 지역계획

방재, 수자원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도시설계

국토계획, 지역경제분석

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중국경제, 중국지역개발 및 정책, 중국에너지 자원, 동북아지역

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도시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발전계획, 공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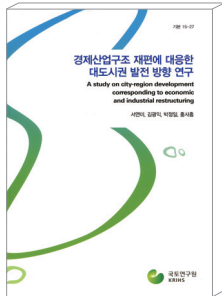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GI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산업입지, 도시계획

도시네트워크, 공간분석

지역계획 및 정책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 방향 연구

A Study on City-region Development Corresponding to
Economic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연구책임 서연미 | 연구진 김광익, 박정일, 홍사흠 | 기본 15-27 | 18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탈공업화, 지식기반화, 경제의 서비스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대도시권의 변화를 검토하고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대도시권의 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대도시권의 발전방향을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거점화, 기능적 전문화를 통한 경제권 형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함
- 지식기반산업의 대도시권 내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이전-폐업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성장산업 거점역할을 검토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조업 연구, 생산, 사무, 판매·서비스 기능의 전문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기능적 분담을 통한 연계 가능성을 살펴봄

| 연구결과 |

탈산업화, 지식기반화, 서비스경제화 등 경제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도시권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수도권에서와 같이 중심도시인 서울의 탈산업화로 제조업이 감소하더라도 인근 시·군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대도시권은 중요한 제조업 공간으로서 위상을 유지
- 대도시권은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유자-이전-폐업 활동의 거점으로 가능

대도시권이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의 집적은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이전보다 개별 대도시권의 내부성장에 의한

-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 입지를 이전한 사업체 중 지식기반 제조업의 92.5%, 지식기반서비스업의 96.3%가 대도시권 내부에서 이전하고 있음

지식기반산업의 대도시권 내 집중도,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간 지식산업 성장 및 이전패턴, 제조업 내 기능별 전문화는 대도시권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남

- 수도권에서는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 간에 제조업 내 기능적 분담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 간에 기능적 전문화가 두드러지지 않음
-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으로서 대도시권의 위상과 역할 역시 산업의 종류와 대도시권별 및 대도시권 내 위계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남

| 정책제안 |

대도시권 단위의 지역산업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권 형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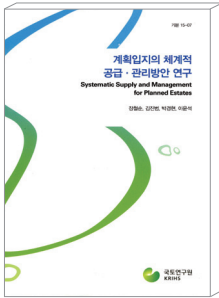
- 기능적 연계 및 신성장산업 거점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
- 대도시권별 위상이나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

대도시권의 기능적 분담 및 연계 강화가 필요

- 중심도시와 인근 도시 간 특화·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
-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중심도시와 인근 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산업입지 공급
-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중심도시의 중추기능 및 정주여건 강화

대도시권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신성장산업 거점화가 필요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대도시권 내 기업지원체계 구축
- 타깃 전략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 대도시권 내 지자체 간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체계 구축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Systematic Supply and Management for Planned Estates

연구책임 장철순 | 연구진 김진범, 박경현, 이윤석 | 기본 15-07 | 152면

| 연구목적 |

전형적인 산업단지에서부터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입지 유형이 많아지고 있음

- 다양한 계획입지 유형들은 통합적인 체계 속에서 공급되고 관리되지 못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공급·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 통합적인 공급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지가 과잉지정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 미개발, 유사 계획입지들 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산업용지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정·개발·관리 등 단계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체계적 공급·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결과 |

3개 계획입지 중 산업단지만이 수급관리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는 산업단지에는 없는 엄격한 지정기준과 사업성과 평가에 기반한 추가적인 지원체계가 있음

3개 계획입지 중 개발이 완료된 계획입지는 면적기준으로 오직 약 40%(지구수 기준 65%)에 불과하며, 지정 후 개발이 부진하거나 장기화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서로 다른 계획입지들이 인접지에 지정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대전과 부산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 지정된 산업용지 위에 추가적으로 계획입지를 중첩하여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는 이미 특정 도시들이 추가 계획입지를 지정할 때 기 지정된 계획입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본 연구는 실태분석, 사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정, 개발, 관리 단계 각각에서 계획입지의 한계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계획입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설정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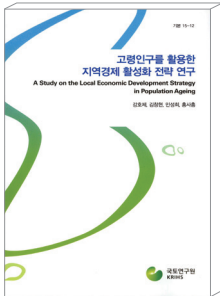
- 계획입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4%)이 계획입지가 국가·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계획입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8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계획입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지정, 개발, 운영, 관리 단계 중 어떤 단계의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고, 부분통합이 37.5%로 나타남

| 정책제안 |

본 연구에서는 계획입지의 지정, 개발, 관리단계의 정책 고려사항을 장기 정책과제로 중·장기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단기 정책과제로 정량적 지정기준 강화, 국가·지역·도시 차원에서 10년 단위 수급관리계획 수립, 신규 계획입지 지정시 기 지정된 계획입지 활용 원칙 적용, 인센티브와 연계된 성과평가 실시, 지정해제 기준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는 시도별 환경영향 및 계획입지 수요 등을 감안한 총량관리 도입, 모든 계획입지 유형을 포함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차원에서 계획입지를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계획입지 통합관리위원회 설치, 계획입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일정기간 동안 미개발될 경우 다른 계획입지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3개 계획입지 유형 각각을 대상으로 선택적 맞춤형 지원제도, 산업입지통합법(가칭)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하였음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Population Ageing

연구책임 강호제 | 연구진 김창현, 민성희, 홍사흠 | 기본 15-12 | 138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지역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을 조사함으로써 지역별로 적용가능한 고령인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미 고령지역(14~20% 미만) 혹은 초고령지역(20% 이상)에 도달할 정도로 지역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의 지역 현상은 간과되어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지역별 고령인구의 현황, 지역경제와의 관계, 지역산업 활용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해외 선진국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연금소득과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인구의 대도시 및 지방중소도시로의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일자리 잔존율이나 건강 등 연령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노동력을 보유한 55세에서 64세의 고령인구들은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다가 65세에서 74세까지는 점차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의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고령자 연령에 따라 직업별 잔존율(생존율)이 다르게 나타남

-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고령친화적 산업은 농업임
- 농업과 관계 있는 지방의 음식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에서의 고령자 잔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산업에 대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지역별로 고령자 일자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도 잔존율이 높게 나타남

고령자의 연령별 거주지 선택에서 차이가 나타남

- 55세에서 65세까지는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
- 65세 이후부터 74세까지는 주거비가 낮은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
- 75세 이후부터 농촌지역의 요양원 혹은 대도시에서의 거주 경향이 뚜렷함

| 정책제안 |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령인구 유입과 정착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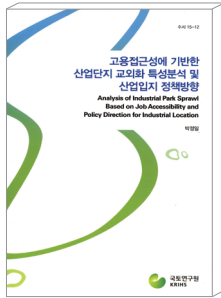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이 가능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고령자 인구유입과 정착지원이 필요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고령자 유입정책이 지원되어야 하며 양호한 자연환경 보존 등이 필요

지방의 고령자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지방으로의 고령자 유치를 위해 세컨드하우스 지원정책이 필요
- 1가구 2주택 중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과세 제외 기준을 확대
-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의 고령자 유치실적에 따라 교부금제도를 인센티브로 운영

지방이전 공기업과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시장 확충과 고령자원 활용

- 지방도시에서의 자연적 인구증가율보다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인구증가가 현저함
- 특히 공기업이 이전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학력수준과 소득이 높은 공기업 종사자의 대거 유입이 진행 중
- 지방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은퇴 후 당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사업 및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Analysis of Industrial Park Sprawl Based on Job Accessibility and Policy Direction for Industrial Location

연구책임 박정일 | 수시 15-12 | 91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교외화의 현황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입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시외곽의 산업단지 공급은 도시 노동자의 고용기회 축소, 자연녹지의 훼손, 통행거리 증가 및 이주로 인한 사회비용 증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직주근접 혹은 고용접근성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그 현황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산업단지 지정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다수는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집중 공급되었으며, 특히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지정건수가 급증하여 2008~2014년 사이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는 총 405개로 전체의 38%를 차지
-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개발이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일반 산업단지의 지정건수는 크게 상승함

산업단지의 교외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정된 신규 산업단지 중 다수가 외곽에 입지하고 있어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이후 산업단지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
- 수도권과 충청권 경계지역과 더불어 동남권과 대경권에 지정된 일부 일반산업단지에서 높은 교외화 지수를 보여 이들 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은 낮음

- 대도시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고용접근성은 양호하나, 주변 인구가 작은 곳에 입지한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높은 교외화 지수를 보임

도시 거주자 고용확대 및 직주근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산업단지 지정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본 자료가 제안한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를 활용하여 도시 거주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직주근접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 정책제안 |

총량제한 위주의 현행 산업단지 지정 검토기준에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확대와 고용접근성 측면의 산업단지 입지기준 마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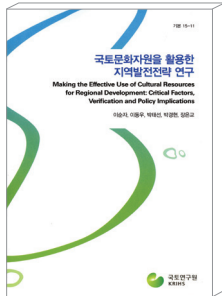
- 현재까지 산업단지는 총량제한 등을 통해 지역 간 공급 조정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도시 거주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직주근접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도입·확대와 고용접근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입지 기준마련이 요구됨

도시 및 지역단위 계획에서의 산업입지정책 연계방안 마련이 요구됨

-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 및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산업입지 정책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교외화를 지양하고 도시 내 산업과 일자리가 유지되고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공급정책이 필요함

- 산업입지와 도시재생사업 간의 공간 전략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의 합리적 배치로 도심 재활성화 및 도시 일자리 창출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화 할 필요가 있음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Making the Effective Use of Cultural Resources for Regional Development:
Critical Factors, Verific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이순자 | 연구진 이동우, 박태선, 박경현, 장은교 | 기본 15-11 | 228면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추진주체의 입장에서 전국 곳곳에 산재한 국토문화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는 전략이 지역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국내사례 심층조사를 통해 이들 요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한 과제와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

| 연구결과 |

국토문화자원의 활용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역발전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 외국사례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함

- 이들로부터 비교우위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과 목적으로 활용, 도시재생 등 관련사업과 연계성 강화, 지원자 및 조력자로서의 정부역할 명확화, 지역 스스로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 조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플랫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 전개 등 시사점 도출

다수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추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

- 학술전자정보 검색엔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된 61건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총 26개분류가 곤란한 요소들을 모은 기타 1개 포함의 중요 영향요인이 도출
- 중요 영향요인 26개를 기초로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 요인들을 상위계층으로 군집한 결과, '문화자원 발굴·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부 역량 강화', '참여·네트워크 확대'의 4개 범주(전략)로 재구조화됨
- 4개 범주(전략)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문화자원 발굴·활용전략'이 0.297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요 영향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증하고 성과와 한계를 찾아내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관련사업 6개를 선정하여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함

-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측면, 제도적 기반 구축 측면, 지역내부 역량 강화 측면,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례마다 차별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지역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임

| 정책제안 |

문화자원의 발굴 촉진 및 활용수준 제고방안

- '기존 문화자원 활용사업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조정', '문화자원의 발굴·조사·연구·개발을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의 확충', '국토문화자원의 활용잠재력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 등을 제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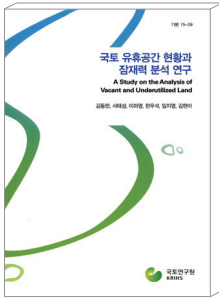
- '국토문화자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제의 완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체계적인 추진기반 제공', '관련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안

지역 주도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방안

- '취약한 인력구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지역의 창의인재 발굴 및 지원', '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현명한 국토문화자원의 활용' 등을 제안

협력적 거버넌스 및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시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람-자원-장소의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결합된 사업 추진과 효과의 확산' 등을 제안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Vacant and Underutilized Land

연구책임 김동한 | 연구진 서태성, 이미영, 한우석, 임지영, 김현아 | 기본 15-29 | 169면

| 연구목적 |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추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평가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음

- 추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면적, 형태 등 물리적 특성과 배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고자 함
- 개발한 방법론을 사례 지역에 적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유휴공간의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
-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방법론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향후 계획지원체계(planning support system)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분석평가 방법과 모형을 활용하여 신규 토지 소비를 줄이고 기존 도시를 재이용하는 자원순환형 국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토 유휴공간 분석의 활용 및 확장 방안과 공간계획적 함의 제시

| 연구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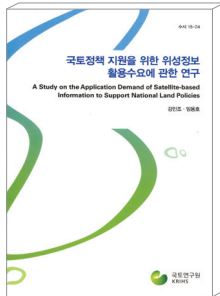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 안정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정주 지역이나 도시지역 내에서 유휴화되거나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이 증가하고 있음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유휴공간의 실체를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휴공간의 현황 및 잠재력 분석방법을 정립

- 유휴공간의 분석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제시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계획지원체계를 시험개발
-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국토·도시 정책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

| 정책제언 |

- 유휴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자료 공유
- 유휴공간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보급: 중앙정부는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여건에 따라 수정 및 보완
- 유휴공간 현황조사의 체계화, 정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생계획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분석 및 잠재력 평가를 포함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정책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 수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Demand of Satellite-based Information to Support National Land Policies

연구책임 강민조 | 연구진 임용호 | 수시 15-24 | 131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토분야 현업지원을 위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차세대중형위성영상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도출함으로써 국토정책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위성정보 활용이 가능한 국토관련 업무분야 도출을 통해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위성영상 활용기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국토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 국가 위성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국토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운영'의 기반연구(2016~2020년) 중 2016년에 수행할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결과 |

본 연구는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자 측면에서 차세대중형위성영상 활용분야를 도출함

- 국토관련 현업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조직별 업무 대상으로 차세대중형위성 활용 가능성이 있는 7개 활용분야 도출 및 위성영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면담 조사 결과 차세대중형위성 활용가능성이 있는 20개 활용분야 도출

본 연구는 차세대중형위성영상의 활용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는 활용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음

- (북한지역 국토개발 현황 모니터링) 고해상도 영상에 최적화된 토지피복분류, 자동화 변화탐지, 스테레오영상 분석 및 객체추출기술 개발이 필요
- (도시녹지 모니터링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생지수 기반의 토지피복분류,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화 변화탐지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

본 연구는 위성영상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토관련 분야의 위성 영상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정책제안 |

위성영상 활용촉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역할 제시

- 활용전담기구 설립, 활용SW 및 활용기술 개발, 법·제도 정책적 지원 제시

범부처적 효율적 위성활용 추진 방안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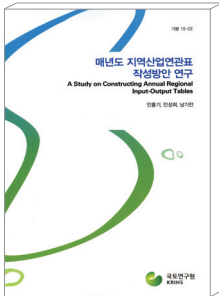
- 위성정보 통합센터는 Data 통합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별 위성정보 활용센터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수요자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음

R&D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을 통한 국토관측 위성영상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 공공부문의 국토관련 현업지원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위성영상 활용촉진을 위하여 위성영상 등록, DB구축 및 검색기능 개발, 위성영상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토관측 위성영상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국토관련 현업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 기반 조성 구축 마련

- 위성정보 수요 대응 및 활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 기반시설 구축 및 표준체계 마련, 수요맞춤형 활용기술 개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마련 되어야 함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A Study on Constructing Annual Regional Input-output Tables

연구책임 안흥기 | 연구진 민성희, 남기찬 | 기본 15-22 | 165면

| 연구목적 |

2006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한국은행 전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보다 작성이 용이하면서도 정합성 있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고, 또한 부정기적인 지역산업 연관표를 보완할 수 있어 시의성 있는 지역정책 및 지역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연구결과 |

적은 자료와 비용으로 매년도 산업연관표 작성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혹은 추정에 따른 연구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기준연도 지역산업연관표의 상품별 생산구조 및 지역 간 거래 구조 정보와 매년도 전국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생산흐름 및 지역별 비중변화 정보 등을 결합하여 정합성 있는 매년도 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약함

기존에는 5~10년 전의 경제구조를 반영한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최신(2년 전)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분석이 가능해져 각종 지역개발 정책의 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의 시의성을 제고함

- 전국 혹은 지역산업연관표의 발표주기(매 5년) 및 발표시기(약 3년 소요)를 고려할 때 현재시점과 산업연관표 작성 기준 연도와는 최소 3년에서 8년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매년 전국산업 연관표 발표시기에 맞추어 작성된다면 시차가 2년으로 크게 단축됨

| 정책제언 |

지역정책효과 분석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고용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표 등 부속표 산정에 관한 연구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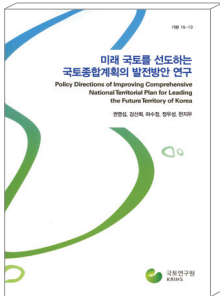
- 기타 지역경제의 구조변화 및 지역 간 경제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도 병행되어야 정책효과 분석 외에도 다양한 지역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경제주체 간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계정의 개발 등 지속적인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필요

- 소득계층별 지역정책효과 분석 등 보다 세분화된 지역정책 및 연구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계정(social account matrix)의 작성이 필요함

이러한 모형개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다년도의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형개발 당시와는 경제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인 개선 등 유지관리가 보다 중요함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Policy Directions of Improving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for Leading the Future Territory of Korea

연구책임 권영섭 | 연구진 김선희, 하수정, 정우성 | 기본 15-13 | 223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위상, 체계,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주요국의 국토종합계획 운영 사례 및 동향을 분석하고,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위상 및 실태를 진단함
- 둘째,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 정비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

| 연구결과 |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실효성을 분석

- 국토종합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법정계획·장기계획·종합계획에 대한 필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토종합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무용론 3.3%에 불과) 성격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3%를 차지
- 국토종합계획이 장기계획으로서 계획수립시기 유지론이 우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은 수정과 유지론이 비승
- 국토종합계획의 성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적·지침적 계획(50.3%), 지침계획이면서 실천계획(44.4%), 실천계획(5.3%)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천력 강화 내용으로는 성과 평가와 반영, 모니터링, 정합성, 예산과 자원, 자율조항의 의무 조항화 등의 의견이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음
- 다양한 부문계획·지역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이 종합화·단권화·시스템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임(68.2%)

| 정책제안 |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재정립

- 20년 주기의 장기·종합·전략계획으로 유지하고, 5년마다 정부의 정책과 연동하는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국토종합계획의 위상 및 타 계획과의 관계 정립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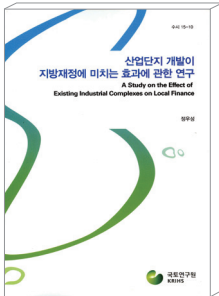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지침계획(20년)을 고려, 국토종합계획(중기)전략계획(5년)은 연동계획 수립 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반영,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계획기간을 일치 시키고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연계 추진 중
- 비법정계획을 선행하고 이를 법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국토장기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발굴, 5년 중기전략계획에 반영하여 정책기능 강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적 범위를 포괄적·체계적 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개편

- 통일·동북아, 초지역, 초부문, 해양영토, 농산어촌 공간, 재생·정비·관리·유지, 각 부문의 입지관리 지침 등 상위적 관리체계 확보
- 장기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개편과 경쟁력·균형·삶의 질 단위로 도시권 단위 포함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 및 선도 방안

- 성과의 정기적 평가 및 반영, 부문 및 하위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자원마련 근거 규정은 법상에 있으므로 실천되지 않는 부분의 이행이 필요하고, 5년 연동계획 의무조항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자원마련 부문에서 시행령 마련 등이 필요
- 미래 국토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장기, 실천력, 미래, 전략, 여론수렴, 최상위계획, 지침, 선제적, 큰 틀,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on Local Finance

연구책임 정우성 | 수시 15~10 | 100면

| 연구목적 |

산업단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지역의 산업구조 및 입지한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산업단지가 지방재정, 특히 지방세입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관련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구득가능성과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인 울산을 사례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입과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생산, 고용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가령, 10인 이상 제조업 전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생산 및 고용 비중은 각각 69%와 52%를 차지하며, 특히 울산, 경남, 경북, 전남 등 대기업 중심 산업단지가 집적한 지역에서 큼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 기업 관련 주요 지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가 있으며, 그 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약 5조 4천억 원으로 지방세(약 53조 7천억 원)의 10.1%를 차지함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임

- 2012년도 시도별 산업단지 감면액의 경우, 특히, 경남과 울산(14.7%), 전남(11.9%), 경남(11.4%)지역은 산업단지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지방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중인 3.5%를 크게 상회함

울산을 사례로 살펴본 결과 2013년을 기준으로 산업단지에서 징수한 기업관련 지방세는 3,014억 원이며, 이는 울산 자체 수입 1조 8,283억 원의 16.4% 수준임

-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349억 원으로 산업단지의 기업관련 지방세의 11.5% 수준임

| 정책제안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탄력적인 운용 확대

- 지역별 재정여건과 산업단지별 업종 특성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율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확충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적정수준 관리 역량 및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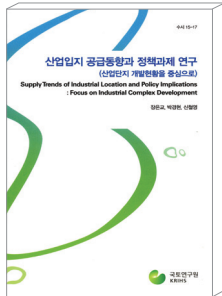
-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급은 단기적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산업입지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수급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대안 모색이 필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 지방세 감면의 차등적용

-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조성단계에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취득세 감면 부문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정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감면 부문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 필요

지방세입과 지방세 감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액 증가분을 지역 특화산업육성이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기업유치활동에 활용 검토 필요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Supply Trends of Industrial Loc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Focus o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연구책임 장은교 | 연구진 박경현, 신철영 | 수시 15-17 | 129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개발부진산업단지 공급동향 분석을 통한 미개발 산업단지 해소차원의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임

-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 산업입지 정책동향과 산업단지 공급동향을 분석
- 개발부진산업단지의 지역별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개발부진 산업단지 해소를 위한 수급관리 방안을 제시함

| 연구결과 |

개발부진산업단지 범위 설정 및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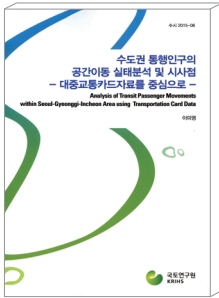
- 개발부진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발률이 50% 미만인 산업단지로 정의함
- 2015년 9월 기준 전체산업단지 1,102개 중 개발부진산업단지는 101개
- 전체 산업단지 개발률 75.7%에 비해 개발부진산업단지 개발률은 9.2%에 불과하고, 전체 산업단지 미개발면적 276km² 중 70%에 해당하는 190.6km²가 개발부진산업단지의 미개발 면적임

개발부진산업단지 특성분석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대부분은 민간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지정승인된 산업단지가 수요 미확보 등으로 미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북도는 지역별 미개발면적 중 개발부진산업단지 미개발면적 비중이 70% 이상으로 개발부진산업단지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 경우 개발부진산업단지 중 실수요산업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민간 실수요산업단지의 수요검증이 특히 필요한 지역임

| 정책제안 |

- 개발부진산업단지의 개발부진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용성 제고를 위해 통합정보망 구축
- 민간개발 수급관리 차원에서 실수요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허용비율 상향과 주변미개발 산업용지를 고려한 개발수요 및 타당성 검증 구체화
- 개발부진산업단지의 미개발 비율, 개발부진 정도 등에 따라 시·도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준 재정립
- 지역 내 계획입지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입지 비율기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도 자체적으로 운영
- 인접한 개발부진산업단지를 광역적 수급관리산업단지로 분류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유휴산업단지로 활용
- 시·군·구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시·도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마련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ransit Passenger Movements within Seoul-Gyeonggi-Incheon Area Using
Transportation Card Data

연구책임 이미영 | 수시 15-06 | 92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별 생활권역의 통행인구 이동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수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통행인구의 이동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를 통한 효과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가능함. 특히 1일 평균 2천만여 건의 통행이 서울-경기-인천의 통합대중교통망에서 이동하는 개별 통행단위의 자료를 다양한 분석수준으로 연계·활용하는 효과적 방안을 제시함

| 연구결과 |

수도권 인구이동의 실증분석을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카드 자료를 활용하는 개념적 방법론을 제안함

-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통행에 기반한 분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계통행(Trip Chain, Travel) 개념을 도입하였음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버스-도시철도의 통합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방안을 활용하였음

- 도시철도 내부통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철도 이용자 행태모형을 적용하였음

전수화가 가능한 비집계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통행인구의 이동현황에 대한 분석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기존의 5년 단위 가구통행실태조사 기반의 집계OD자료보다 개별 이동이 모두 포함된 1일 단위의 분석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음

| 정책제안 |

수도권은 전수화 통행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통합대중교통체계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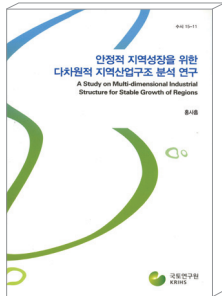
- 수도권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의 실증진단 및 버스와 지하철 연계통행(Trip Chain, Travel) 진단, 서울-경기-인천 3개 지역 간 환승통행 진단이 가능함
- 지하철내부 환승통행 파악, 수도권 대중교통 수익금정산 및 요금책정, 수도권 3개 지자체 환승지점과 인구이동규모 진단이 가능함

전수화가 가능한 비집계자료인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통행인구의 공간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및 지역밀착형 지역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

- 도시계획의 양적(downsizing, 축소) 및 질적(diversification, 다양화) 측면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맞춤형 도시 계획체계 개편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계획,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검증 및 수도권 광역버스 연결망 조정에 활용

수도권 전체 이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교통카드 이용 자료와 개인교통 이용실태(승용차, 택시 등)를 함께 분석하는 방안 필요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A Study on Multi-dimensional Industrial Structure for Stable Growth of Regions

연구책임 홍사흠 | 수시 15-11 | 121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구조 측정지표의 소개 및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측정과 분석을 진행하여 각 지역들이 전체적인 산업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는지 연구

- 지역산업구조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문헌 및 지표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표의 적용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측정
- 다양한 지표의 적용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측정된 지역산업 구조의 특성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안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연구결과 |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나 산업기반이 약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경우 산업구조적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울산이나 강원, 제주처럼 산업의 기본적 발달이 타 지역에 비해 느림과 동시에 관광 관련 업종의 집중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는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산업 구조의 절대적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서비스와 같이 전문서비스 부문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지역들의 다양성 지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광주, 충남처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나 '사업 시설 및 지원' 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부문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지역들의 다양성 지표가 증가함
- 제주의 경우 기존의 '도소매업 및 숙박 등과 같은 관광관련 산업' 부문이 앞에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임

산업구조적 다양성이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적 기술 서비스업의 구성 비율이 증가한 경기, 인천이나 첨단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한 충북 지역의 다양성이 높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들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됨

| 정책제안 |

국토정책적 관점에서 산업구조 역할을 재조명해야 함

-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단기적 성장'의 달성이라는 기존 지역 발전전략을 보완하여 지역 전체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기반한 경제적 안정과 회복을 고려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모색이 필요
- 지역의 특성을 배제한 일률적인 특화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지역 내 산업구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성장을 위해서 산업구조를 다양화해야 함

- 다양화에 기반한 산업구조 전략을 통해 다소 늦지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잠재력을 지닌 산업구조 수반이 필수적이며 이를 목표로 한 산업구조 정책의 실시가 요구됨

지역산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정책 수립

- 낮은 구조적 다양성과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이른바 고착(lock-in)형의 지역경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제조업 위주 지역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산업구조를 전문지식 및 사업서비스 분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특화를 통한 발전전략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획일적인 특화발전 전략에서 진일보하여 EU의 스마트전문화와 같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고 유연한 형태의 산업구조 정책으로 변모해야 함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 System of China's Overseas Industrial Zone

연구책임 이현주 | 수시 15-13 | 87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국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개발 및 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결과 |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자국 내 제조업 경영여건의 변화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심화 등의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추진되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중국의 국가급 해외경제무역협력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별로 투자 대상국의 저비용 생산요소를 활용해 생산가공하는 가공 제조형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지역별로 아프리카 5개국(나이지리아, 잠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리셔스)에 6개 협력구, 아시아 5개국(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6개 협력구, 동유럽 1개국(러시아)에 2개 협력구가 각각 조성되고 있음
- 시행사 설립방식은 협력구마다 다르며 러시아 우수리스크 협력구의 경우 시행사가 단지 내 공장과 인프라 및 부대시설 건설부터 기업유치 및 서비스 지원까지 일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기본방향과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재정 및 금융지원과 협력구의 승인요건, 연도별 심사, 벌칙 등 심사평가제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최근 협력구의 유형에 있어 기존의 노동집약형 가공제조 유형 외에 고위기술 또는 제품의 R&D, 생산위주의 기술혁신형 또는 과학기술산업형 등 고도화된 형태의 협력구 조성도 권장하고 있음

- 중국은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협력구의 기능, 시행사 요건 및 실적에 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정책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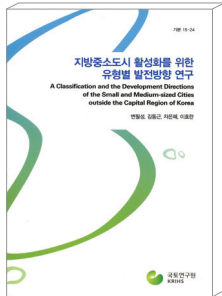
한·중 간 산업분업관계 측면에서 기술 집약형 또는 비즈니스 물류형 등 보다 고도화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기존 유형인 가공제조형, 농업 및 자원이용형 유형 외에 R&D, 기술개발 등 고위기술 분야의 산업단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음
- 한·중 간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고위기술 분야 또는 비즈니스 물류 분야에 특화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업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향후 한·중 산업단지 조성 시 한·중 양국의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된 시행사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일원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협력구 사례와 같이 정부는 협력구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제시와 재정 및 금융지원에 집중하며 협력구의 개발과 운영, 관리는 주로 시행사가 일원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자율적이면서도 일원화된 관리체계는 협력구의 전반적인 계획에 따른 관리 운영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의 원활한 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한·중 산업단지 조성고 관련해 개발 및 지원제도에만 집중하기보다 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후 평가체계와 명확한 기준을 양국이 협력하며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함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A Classification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연구책임 변필성 | 연구진 김동근, 차은혜, 이호란 | 기본 15-24 | 290면

| 연구목적 |

지방중소도시 대다수가 인구변화 및 고령화, 재정력, 소득수준 등 도시 내부속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그간 지방중소도시가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등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여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을 논의함

-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과 유형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도시의 관계적 속성, 그리고 중소도시 발전을 둘러싼 제반 가치에 근거하여 도시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강조함
- 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해 임계규모를 실질적·지속적으로 달성하고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게 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연구결과 |

지방중소도시는 그간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인구 변화, 일자리수 변화 등 도시 내부속성에 있어서도 전국 또는 수도권 지역의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이에 대응하여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 점은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대한 분석(지배력지수,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네트워크 제약 등), 위상에 따른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을 통해 현저히 나타남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 창출이라는 정책적 지향점하에서, 도시 간 연계협력 추진을 통해 임계규모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유형별 발전방향의 기본이며, 세부내용은 대도시 영향권 발전, 대도시 영향권 외 중소도시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차별화됨

| 정책제안 |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해, 국가는 현행 관련 제도를 도시 간 연계협력의 공간적 수단으로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국 도시체계의 질적 발전, 즉 공유재로서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장소의 생산 및 유지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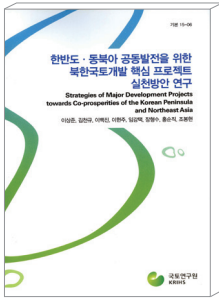
- 특히 국가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삶의 질 유지 차원에서 고차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 영향권 외 지방중소도시 네트워크가 대도시 영향권과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사전 준비도 지원해야 함

지방중소도시와 다른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임계규모의 실질적·지속적 달성으로 인해 생산, 이용되는 공유재인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국가 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도 필요함

- 해당 공유재, 즉 네트워크 생산·이용 주체인 도시(또는 도시민)가 자치적으로 공동 관리하되, 국가가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합법성을 부여하거나 교통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는 도시 간 연계협력 제 측면의 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도시 간 공유재인 네트워크의 생산·이용 주체가 구득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함

- 또한 도시 간 조정된 집합적 의사결정에 따른 이득(순편익)과 도시별 독자적 행동에 따른 이득(순편익) 간의 비교 평가기법 개발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이 요구됨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개발 핵심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Strategies of Major Development Projects towards Co-prosper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연구책임 이상준 | 연구진 김천규, 이백진, 이현주 | 기본 15-06 | 195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프로젝트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북한 국토·인프라개발분야 핵심 프로젝트는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북한 내 지역개발과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핵심 거점 프로젝트 9개(개성-해주 프로젝트, 평양-남포 프로젝트, 신의주-단동 프로젝트,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신포-단천 프로젝트,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의미함

|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북한국토 인프라 개발 핵심프로젝트 추진 전략으로 남북협력과 국제관계의 발전에 맞춘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체계와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자원조달 전략을 제시하였음

-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11개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차원의 협조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평양-남포 프로젝트나 개성-해주 프로젝트처럼 산업단지 개발 중심형 프로젝트와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나 금강산-원산 프로젝트와 같은 관광산업 중심형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자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개발 중심형 프로젝트의 경우 공적부문의 역할이 민간부문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봄

본 연구에서는 11개 핵심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함께 다자협력 및 남북협력 중심의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추진 체계, 추진전략 및 맞춤형 자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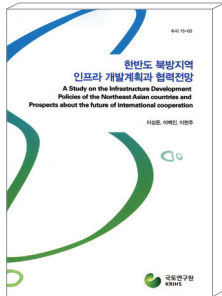
-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사업과 관련해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는 조기 착수가 필요하며 중단기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북·중·러 접경의 핵심 프로젝트들과 남북접경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다자협력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는 신의주-단동 프로젝트, 나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가 있음
- 남북협력 중심의 핵심 프로젝트로는 개성-해주 프로젝트, 평양-남포 프로젝트,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신포-단천 프로젝트, 평화지대 프로젝트가 있음

| 정책제안 |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국제협력과 연계해서 ‘(가칭)한반도 인프라회랑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포럼형태의 국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련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 정부가 제시한 ‘드레스덴 선언’의 실질적인 실천과제로서 핵심 프로젝트를 북측과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의제로서 핵심 프로젝트 추진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핵심 프로젝트를 반영한 장기 한반도 국토발전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A Study on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Prospects about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연구책임 이상준 | 연구진 이백진, 이현주 | 수시 15-03 | 9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최근 동북아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북방지역의 인프라 연계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교통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정책과 국제기구들의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한반도와 주변국의 인프라 연계가 가져올 편익을 살펴봄

| 연구결과 |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가 연결됨으로써 동북아의 경제교류 단절구간(missing link)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임

한반도와 북방지역이 연결될 경우 현재까지 낙후지역이었던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은 동북아의 교통물류 거점과 자원개발 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이 크게 증대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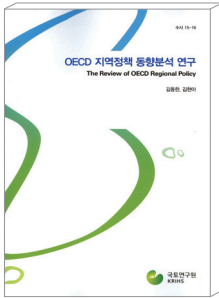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인프라 연계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

향후 교통물류분야와 에너지분야의 한반도-동북아 연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공동연구와 시범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인프라 투자는 행(AIB)을 고려한 국제협력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 구상의 실천 차원에서 한반도-동북아 인프라 연계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The Review of OECD Regional Policy

연구책임 김동한 | 연구진 김현아 | 수시 15-16 | 94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작성되어 온 OECD 지역정책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정리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토·지역·도시 정책담당자가 OECD 지역정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간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지역·도시 정책 분야에 있어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국토·지역·도시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조사·분석

지역개발정책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의 지역정책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

국토·지역·도시 정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향 제시

| 정책제안 |

지역개발정책위원회에서의 우리나라의 활동 및 위상 강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제적 역량 강화

개별 회원국과의 정책공조 및 상호교류 확대: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강화, 한국형 지역개발 정책의 수출 및 전파

수평적-수직적 협업에 기반을 둔 대표단 구성 및 회의 참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되 유관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

장소기반, 증거기반, 데이터추동, 다계층적 지역정책의 개발과 집행

전문기관(국토연구원 등)의 역할과 위상 강화

2 도시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문화 및 관광, 건강장수도시 연구, 둘째,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국토 및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및 개발 연구, 셋째, 기후변화 및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방재 연구, 넷째, ICT와 융복합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및 녹색 도시 연구 등이며,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이용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Bonn 지리학 박사

이왕건 | 선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김명수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이재용 | 연구위원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유재윤 | 선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경제학 박사

김태환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지리학 박사

김창현 | 연구위원 | 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상조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조판기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박세훈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왕광익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김성수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석사

김은란 | 연구위원 | 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이범현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

김중은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임상연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박정은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계획) 박사

김동근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박종순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mbridge 지리학 박사

이승욱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정소양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이병재 | 책임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박소영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이상은 | 책임연구위원 |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

구형수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김수진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개발계획학 박사

이성원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배유진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임지영 |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 박사

송지은 | 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국토계획, 국토계획평가, 미래국토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개발,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정책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사공간분석

도시재생, 경제기반활력

건강장수도시, 지역계획

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도시정책, 도시제도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생활인프라/도시복지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도시문화(다문화)

도시정책, 기후변화, 해외도시개발

도시계획 및 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디자인/경관

도시계획 제도, 교외신도시재생, 개발제한구역제도

지역 · 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도시정책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문화

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도시재생, 도시계획

수자원관리,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도 분석

도시계획, 공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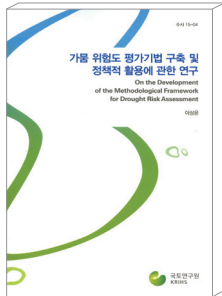
도시설계, 도시개발, 도시정책

스마트 도시, 융합복합적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재생, 공공투자

국토 및 지역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On the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Drought Risk Assessment

연구책임 이상은 | 수시 15-04 | 121면

| 연구목적 |

기후변화로 극심한 수문현상이 일상화되고 가뭄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가뭄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기술의 역량 확보가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가뭄 위험도 중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 고충에 초점을 두고 최근 발전된 기상수문분석기술, 시스템 분석 기술, GIS 기술 등을 연계해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가뭄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사례 연구를 통해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결과 |

가뭄 위험도에 대한 개념 및 방법론체계 구축

- 자연재해 측면에서 가뭄 위험도를 정의하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정책수요 분석
- 정책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론적 요구조건을 정의하고, 체계적인 위험도 분석절차를 제시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제시

- 기상자료 분석기법을 응용한 가뭄의 발생에 대한 재해특성 분석 기법 제시
- 용수수급 해석 기법을 응용한 노출특성 분석기법 제시
- 과거 가뭄 피해 곡선에 근거한 취약성 분석기법 제시
- 사회경제적 피해 위험도에 대한 공간 분석기법 제시

사례연구를 통한 방법론의 타당성 및 유용성 검증

- 과거 피해를 경험한 소규모 용수전용댐과 용수공급지역에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해, 심각한 가뭄과 극단적인 가뭄 각각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저감대책 방안 검토

| 정책제안 |

전 국토에 걸친 가뭄 위험도 평가 실시

- 극심한 가뭄 발생 시 잠재적 피해 수준이 높은 고위험구역을 선제적으로 파악

지역맞춤형 가뭄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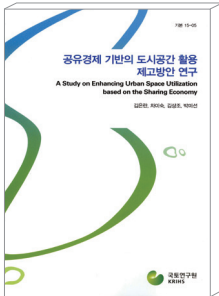
- 위험도 평가기술을 활용해 고위험구역의 위험가중 요인에 맞는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감대책 시범사업 추진

가뭄 피해민감성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

- 실제 가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피해민 감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대책을 조사하고 도시·환경·의료·복지 등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대응

가뭄 위험도 평가 역량 구축

- 가뭄 위험도 평가 기술을 농업용수, 농업용수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R&D 투자 확대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ing Urban Space Utilization Based on the Sharing Economy

연구책임 김은란 | 연구진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 | 기본 15-05 | 187면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한 도시공간 활성화와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커니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도시공간 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를 고찰
- 국내외 연구성과 평가법제를 분석하고, 연구개발시스템 내에서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제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 연구결과 |

사물인터넷의 발달(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 기술발달)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공간공유는 숙박공유, 세어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 주차공유, 공공시설 공유 등 거주공간, 업무공간, 여가공간, 공공공간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

공간공유의 다양화와 영역 확대에 따른 도시공간의 시공간적 활용성 증대와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적 잠재력 증대

- 반면에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시장영역의 침해 개인정보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가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공간활용의 복합화는 기존 계획체계의 토지이용 합리성 부분에서 잠재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높임

국내외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공유 경제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정비 요구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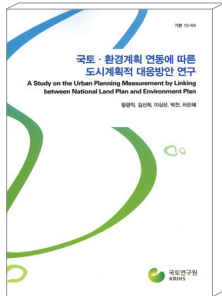
| 정책제안 |

소유에서 공유로 공간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국토관리 및 도시공간정책 측면에서 기존 법제도 정비와 참여자의 신뢰 및 안전 담보를 위한 장치 마련

공간공유의 규모와 영향 측정을 위한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기초통계 구축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

- 용도지역에 따른 숙박공유 허용기준의 차별화
- 세어하우스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정비
-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코워킹 스페이스의 활성화
- 카셰어링과 연계한 주차공유 활성화
- 공공시설의 공유 확대와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 활성화
- 공간공유 유형별 도시재생 잠재력 활용
- 마을단위 공유공동체 모델 활성화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유경제 거점 구축
- 정부자산 공유 및 플랫폼 구축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Measurement by Linking between National Land Plan and Environment Plan

연구책임 왕광익 | 연구진 김선희, 이상은, 박찬, 차은혜 | 기본 15-04 | 183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실천 방안으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계획 간 연계 가능성을 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차원의 대응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공간계획 연계를 통해 선정된 사례 지자체의 계획에 실증분석을 수행해 국토·환경 연동제의 실천 방안을 분석
-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결과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와 관련된 정책 동향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의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 및 법제도 변화 파악
-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의 국토·환경계획체계를 검토하여 계획 간의 연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사용하는 국토공간 정보와 환경공간정보의 연계방법을 제안

- 구청주시 지역 및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측면에서 비오톱 지도와 생태네트워크 계획을 활용한 환경 보전계획과의 연동방안을 제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적 연동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과 관련된 중장기적 연계·협력의 틀 제시

-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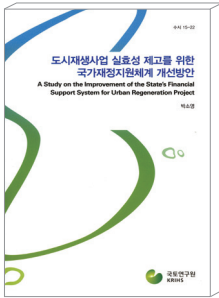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대응방안 제시
- 국토·환경계획 통합적 연동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 정책제안 |

국토·환경계획에서 공통된 부분들을 연동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 도 차원, 지자체 차원 각각에 대해 유역, 수계, 지형, 생태 등을 고려한 생태네트워크 설정방안 구축

비오톱의 평가 및 보전관리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도시·군계획 수립 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비오톱 지도를 활용하여 보전지역 및 생태네트워크를 설정하도록 지침을 변경 개별 법률이 가진 다양한 실행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계획수립 내용에 반영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A Study for Improving National Public Spending System on Urban Regeneration

연구책임 박소영 | 수시 15-22 | 93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잠재성장률 저하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건축재정으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도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 극대화 필요
- 재정의 효과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선진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체계는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지향하는 장소중심의 통합적 사업추진과 다양한 주체의 협업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이나 국민 최저생활 보장, 지역 간 격차해소, 사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국고 보조는 매년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다른 사업에 비하여 지원여부 또는 지원규모 등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예산지원체계의 문제는 지역맞춤형 상향식 사업 및 통합과 연계라는 도시재생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고 무조건적 예산확보 경쟁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역의 거버넌스가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방식을 도입

| 정책제안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지원계정'의 차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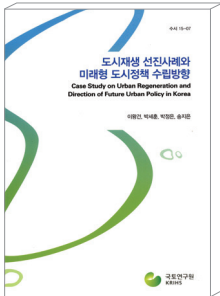
-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목적에 따라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회계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파급효과가 도시 및 지역에 미치는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발전계정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근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파급효과가 지역 내에 머무르는 근린재생형은 생활기반계정에서 지원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재정지원체계' 차별화

- 도시경제기반형: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을 유지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비전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상호 투자를 협약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 정책방향으로의 유인 효과를 제고, 특히 협약의 주체를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지역 거버넌스로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협력을 유도
- 근린재생형: 완전 경쟁보다는 공식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경쟁토록 하여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보다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유인. 포괄보조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 공급

통합과 협력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과 별개로 인력지원과 계획지원 프로그램 도입

- 도시재생은 다양한 사업, 조직, 예산 등을 연계·조정해야 하는 장소기반 지역발전(Area-based local development) 특성상 지역사회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필요
-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충분히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
- 사문화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상의 계획수립비, 전문가 파견비 지원 실효화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Cas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and Direction of Future Urban Policy in Korea

연구책임 이왕건 | 연구진 박세훈, 박정은, 송지은 | 수시 15-07 | 170면

| 연구목적 |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현장감 넘치는 도시별 정보를 직접 수집, 분석하여 양질의 콘텐츠로 가공하여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제공

- 국외의 선진도시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별로 현장감 넘치는 최신 정보를 직접 수집, 분석하고 양질의 콘텐츠로 가공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내도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하는 글로벌 도시전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하거나 양질의 도시 개발사업을 발굴하는 데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결과 |

글로벌 도시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대도시권 차원에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도시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전거, 보행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을 실천하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영국의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축소, 보행공간과 대중교통 확대 등을 통해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
- 일본의 경우 입체도로 건설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체복합도시의 건설, 싱가포르의 고스태타운지역을 마라나베이센스로 개발하여 양질의 문화공간으로 창출
- 밴쿠버는 밴쿠버리즘이라 불리는 독특한 도시계획철학을 통해 도심을 고밀개발하면서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였고 포틀랜드는 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성장관리기법을 적용
- 코펜하겐은 보행자·자전거중심의 도시계획, 오스틴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창조산업을 도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음

- 베를린은 문화창조산업, 드레스덴은 산학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도입하는 등 도시별 특성과 비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미래도시 발전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정책제안 |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국가를 대변할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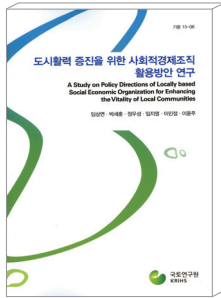
- 지식기반경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 또는 유치가 필수적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 도시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되고 있음

-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이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해외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전략은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도시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성이 존중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끊임없이 수용해가는 도시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로 평가됨
- 공통적인 키워드는 보행친화, 인간중심, 대중교통중심, 타인에 대한 개방성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of Locally base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Enhancing the Vitality of Local Communities

연구책임 임상연 | 연구진 박세훈, 정우성, 임지영, 이윤주, 이민정 | 기본 15-08 | 17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용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경제의 출현 배경 및 특징,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 특성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례를 분석함

| 연구결과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실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기반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 지역자원 활용 측면에서 모든 유형의 조직이 지역주민 고용, 재정자원 활용 등의 지역자원을 조직운영에 활용하며, 주민 공동출자금 모금, 지역 내 자치조직 참여가 사업초기 중요한 자원임
- 지역사회 활동 측면에서 조직의 핵심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관계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업종별로는 사회복지(간병·보육), 건설·마을만들기 업종의 관련도가 높음
-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별로 지역사회 기여활동 참여에 대한 응답이 달라, 마을기업과 비광역시 입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음

지역기반성이 강한 사회적경제조직일수록 정부지원에서 벗어난 독립적 운영을 추구하며, 지역사업 참여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지역사업 참여는 조직이 성장기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시·군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다양한 활동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기반성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성과와 과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역사회 성과는 ① 지역공동체 복원, ② 지역공동체 사업 및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리더와 참여자 육성, ③ 자립적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등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① 신뢰감 있는 회원관계 유지의 어려움 및 이해관계 대립, ② 경영능력 및 전문인력 부족, ③ 새로운 아이템 발굴의 어려움 등

| 정책제안 |

지역사업 관련 조직과의 연계활동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확대

- 지역활성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정책 마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공동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참여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조직 및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성 점검시스템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참여인원, 참여방식, 활동내용, 회원여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정책, 지역 개발/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제안 시 평가지표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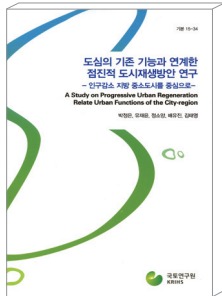
- 오픈 플랫폼 형식의 데이터 센서스 또는 사회적기업 및 영향 투자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 필요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모델 발굴·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유사업종 간 네트워크, 업계 단계화, 조직 광역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의 발굴과 적용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사전준비단계-조직설립-조직성장 등 일련의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gressive Urban Regeneration Relate Urban Functions of the City-region

연구책임 박정은 | 연구진 유재윤, 정소양, 배유진, 김태영 | 기본 15-34 | 296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도심공간에 어떠한 공간적·기능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 현장에 기반한 실증 분석과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지방중소도시의 점진적 재생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지방중소도시 도심의 경제적 기능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유지 또는 강화되고 있는 특화기능 분석을 통하여 기존 도심 기능의 활용·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 |

진주, 익산, 여수, 경주, 목포, 강릉, 충주 등 인구가 감소하는 7개 지방중소도시 공간변화 패턴분석 결과 첫째, 도심 주변 신규 개발 등 영향으로 도심공간이 일정 축으로 확대되었으며, 둘째, 신개발 완료 후, 도심의 관리기능이 유출되며 기존 단핵형태에서 다핵형태로 도심공간 구조가 변화

7개 지방중소도시 도심 기능변화 실증분석 결과, 주변 신규 개발, 공공기관 등 이전으로 인하여 업체수, 종사자수 등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비(도소매 등), 외식(숙박음식업), 금융(금융 및 보험업), 의료 복지(보건 및 사회복지) 등은 도심의 특화기능으로 유지 또는 강화

도심 내 핵심 기능 간 연관성 분석 결과

- (핵심 도심특화 기능) 소비(도소매 등), 외식(숙박음식업), 금융(금융 및 보험업), 의료복지(보건 및 사회복지)는 인구감소 7개 지방중소도시 도심을 대표하는 핵심기능에 해당하므로 이들 기능을 우선적으로 발굴·육성하여 특화 필요

※ 과거와 현재 시점 모두 도심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며 기능 간 상관성이 높은 업종

- (유지·관리대상 기능) 핵심 도심특화 기능과 연계하여 교통(운수)과 행정(공공행정 및 국방) 기능 등은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도심 내 기능 간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유입 필요

※ 과거 대표적인 도심 특화업종이었으며, 현재 핵심 도심특화 기능과 상관성을 보이는 업종

- (유치고려 가능 기능) 그 외, 도심 내 다양한 기능을 육성하고자 할 경우 핵심 기능 및 관리 기능과 연관성이 높은 문화(오락 문화), 교육(교육서비스), 기타(기타서비스업) 기능 등의 유치를 고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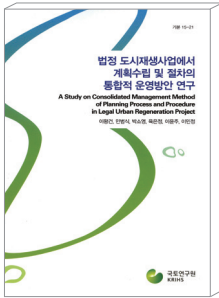
※ 특화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나 핵심 도심 특화 기능, 유지·관리대상 기능과 상관성을 보이는 업종

근본적인 지방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의 소비, 외식, 금융, 의료복지 등 핵심 기능과 연계·활용한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

| 정책제안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 기능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위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전략, 활성화 방안, 정책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연계를 통한 점진적 재생 전략: 기능적·공간적·시간적 연계 전략
- 도심 활성화 방안: 도심 내 유희 또는 미·저활용 공간의 활용, 기존 상권의 보호, 신규 창업 및 투자의 촉진, 적절한 계획 및 정비기법의 도입, 자생적 재생기반 확보 유도, 도심 신탁 관리법의 육성 등
- 정책 지원 방안: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선투자, 재정 및 금융 지원 강화 등 재정 및 금융지원, 저비용 공공시설 또는 국공유지 등 활용, 임대료 협정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중심시가지 신탁관리법인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기타 다양한 형태의 규제완화, 도심활성화 특구 지정, 도심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예: (가칭)도심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등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Consolidated Management Method of Planning Process and Procedure in Leg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연구책임 이왕건 | 연구진 민범식, 박소영, 육은정, 이윤주, 이민정 | 기본 15-21 | 252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정 도시재생 간 통합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법·제도적 정비기반을 개선하고자 함

- 첫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성시기지 재생을 위해 수립된 각종 계획수립의 실태, 사업지구·구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실태, 집행절차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둘째, 유형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일본의 유사사례를 분석함
- 셋째, 법정 도시재생사업의 통합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결과 |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심의자문기구, 행정조직, 공공재정, 특례의제처리기준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확화가 필요함

- 특정지역의 특정문제 해결 또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의 문제해결 중 선택하여 선정된 활성화지역의 특성 고려가 필요함

둘째, 전면적인 법률적 통합 실현보다 통합적 운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셋째, 지자체장과 공무원,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함

- 지자체장 관심도에 따라 통합본부의 운영여부와 효율성, 부서 간 협의수준이 달라짐
- 일부 공무원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별개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관련 법규정에 대해 적극적 해석을 통해 업무분담의 책임회피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정책제안 |

기본 계획들 간의 상호 연동시스템 마련

- 소도시의 경우 단기적으로 전략계획 수립의무를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본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으로 흡수 및 통합이 필요함
- 소단위 정비·재생사업부터 통합적 운영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정합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활성화계획을 통해 수정 변경토록 허용을 제한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위상 제고

- 최고심의 결정기구로서의 권위와 집행력을 제고해야 함

지방위원회 및 지방재원의 통합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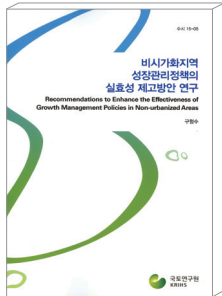
-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기존 유사한 재원을 통합하여 최대한 활용을 도모함

지자체 전담조직의 통합조정능력 및 위상제고

- 도시별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실제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예산배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야 함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관련예산의 통합적 운용

- 현실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함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Non-urbanized Areas

연구책임 구형수 | 수시 15-05 | 109면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최근의 저성장 추세로 인해 향후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고찰해보고,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성장관리정책이 추구해오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임
-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와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에서 수축스프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스프롤의 특성을 보이는 도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축스프롤의 특성을 보이는 도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수축스프롤 현상의 보편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은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시가화에정용지의 단계별 총량의 경우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장래 토지수요량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에서도 사회적 유입률을 이용하여 수요량을 과다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성장관리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재원 조달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정책제안 |

시가화에정용지의 산정방식 개선

- 시가화에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함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지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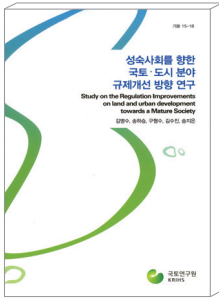
- 도시성장관리에 있어 정책 간의 수직적·수평적 일관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비시가화 지역 제도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함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 신설

-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방법론을 마련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성장관리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함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Study on the Regeneration Improvement on Land and
Urban Development towards a Mature Society

연구책임 김명수 | 연구진 송하승, 구형수, 김수진, 송지은 | 기본 15~18 | 112면

| 연구목적 |

성숙사회에 맞는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규제 분야를 선정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성숙사회 관점에서 규제 평가
- 성숙사회 관점에서 개선과제 기본방향과 개선과제 제시
- 성숙사회 관점에서 과제별 개선방향 제시
- 성숙사회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연구결과 |

연구성과 평가 법제는 연구성과 창출 법제에서 연구개발 사업 또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진의 행위 규범으로 작용

- 연구성과 평가 법제상 제 원칙들은 연구성과 창출 법제에서 행위의 준칙으로 작용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재정립되어야 함
- 질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범체계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연구성과평가법제의 원칙들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최소한의 연구관리체제(표준 매뉴얼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연구성과 평가 법제는 지식과 시장의 연계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비영리(Non-profit) 연구기관들이 시장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연구성과 평가 법제상 연구개발 과제 내지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 및 결과평가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필요

| 정책제안 |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공장총량제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배출기준 강화, 과밀부담금 확대, 개발제한구역 권역 세분화 등 검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확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기준 명확화, 도시계획 과정의 시민참여 보장, 기부채납 기준의 통합 운영 필요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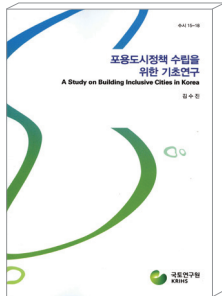
- 수도권경비권역의 조정,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통일성 유지, 기부채납 제도의 통합적 운영 필요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제도를 광역권별로 비전과 전략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선분양 제도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 필요

포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기부채납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용도지역의 지정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



포용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A Study on Building Inclusive Cities in Korea

연구책임 김수진 | 수시 15-18 | 86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사회에 적용가능한 포용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여 「한국적 포용 도시」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부문별 정책들을 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결과 |

포용도시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며,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 공공서비스 및 기회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거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도시를 의미함

- 포용도시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각 국가별 소득수준과 맥락, 도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국가별 · 도시별 여건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 하나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함

포용성이 강화되면 기반시설 제공,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 ·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

- 포용성이 강화되면 인구감소와 도심쇠퇴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현상에 대응할 수 있고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빈곤노동자와 이민자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음
-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체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의 폭 확대,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이 요구됨

포용성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는 크게 미래지표와 진단지표로 구분되며 크게 네 가지 영역(잠재역량, 참여, 배제, 취약성)과 12개의 세부영역(6개의 미래지표와 6개의 진단지표), 24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됨

| 정책제안 |

각 지자체별 비전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현 포용의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실질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역할분담 및 관계 재정립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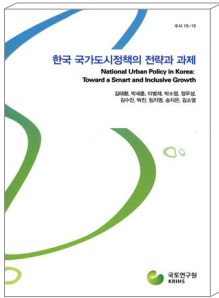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 제공
- 시 · 군 · 구 단위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도시 내 지역 간 격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읍 · 면 · 동)의 작은 지역 단위로 포용 실태를 복합적으로 진단하는 문제를 고려해볼 만함
- 지표를 개발하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거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주관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검토해나가는 모니터링 과정 마련

포용도시는 포용적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선정책과제는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함

-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빈곤노동자, 이민자 및 여성을 도시 경제발전의 주체로 인식해야 함
-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는 도시 경제발전 전략수립이 필요
-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복지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한국형 포용도시 추진계획

- 최대한 세분화된 지표를 포함한 평가절차를 디자인하고 시민사회 참여 및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를 정립
- 범부처적인 해결을 위한 직속위원회 및 기관 설립
-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도시포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National Urban Policy in Korea: Toward a Smart and Inclusive Growth

연구책임 김태환 | 연구진 박세훈, 이병재, 박소영, 정우성, 김수진, 박찬, 임지영, 송지은, 김소영
| 수시 15~15 | 230면

| 연구목적 |

세계화 · 고령화 · 기후변화 등의 사회 · 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도시의 정책방향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마련 필요

- 그동안 한국의 도시정책은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식의 정책이 중심이 되었으며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 마련은 미흡

고도성장과 개발연대를 지나 탈산업 · 탈개발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도시정책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를 재정립하고 추진방안 마련 필요

- 개발시대의 정책과 제도가 중심이 된 현재 도시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

| 연구결과 |

도시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을 정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도시정책의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

- 1960~2000년 개발시대 도시정책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시사점 도출
- 우리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및 도시의 당면 과제 도출
- 미래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세부 정책방향 제시

‘활기찬 성장도시 · 열린 포용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로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는 활력 있는 도시, 창조경제 시대의 혁신적 도시,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도시, 도시 광역화에 대응한 협력적 발전을 다섯 가지 추진과제로 정함

활력, 포용, 협력발전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도시정책 방침 마련 필요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 사회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추진체계 마련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강화

| 정책제안 |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는 활력 있는 도시

- 저성장시대 정착률을 위한 집약적 도시구조의 형성 촉진
-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및 유휴공간의 창조적 활용

창조경제시대의 혁신적 도시

- 도시별 산업의 지식기반강화를 통한 도시형 신산업 경쟁력 제고
- 창조인력 유치 · 육성을 통한 창조적 혁신역량 강화
-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및 역량 강화

더불어 사는 포용적 도시

- 사회적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공공지원 확대
- 모든 거주민을 위해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보
-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공간정책 확대 및 주민주도 참여 거버넌스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도시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활성화를 통해 재해안전도시 조성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형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
- 매력적이고 편리한 공공공간 조성

도시 광역화에 대응한 협력적 발전

- 스마트 대도시권 조성으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창조 인재와 창조산업을 담을 수 있는 창조공간 조성
- 대도시권 관리체계의 구축 및 도시 간, 동농 간 연계협력 강화

3 주택·토지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부동산,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시장분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둘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시장 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 연구, 넷째, 건설경기 동향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다.

연구진

김성일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김근용 | 선임연구위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이수옥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천현숙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김혜승 | 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이학(주거정책) 박사

윤하중 | 연구위원 | 가천대학교 공학 박사

최혁재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이승복 | 연구위원 | 단국대학교 경영학(자원환경관리) 박사

최 수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조진철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박천규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형찬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김승중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변세일 | 연구위원 |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민철 | 책임연구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성제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이태리 | 책임연구원 | The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박사

이윤상 | 책임연구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이재춘 | 책임연구원 | 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안승만 | 책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

최명식 | 책임연구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안종욱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조정희 | 연구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건설산업정책, 건설보증·금융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부동산시장 분석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정책, 주거복지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토지이용 및 개발, 농촌지역 개발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법, 토지정책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건설산업,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주거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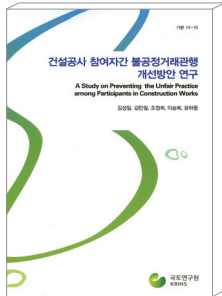
주택정책, 주택계획, 도시 및 환경계획, 교통계획

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토지 및 주택정책, 젠트리피케이션

응용경제, 기술정책, 혁신정책

건설산업, 부동산산업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eventing the Unfair Practice amo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Works

연구책임 김성일 | 연구진 김민철, 조정희, 이승복, 윤하중 | 기본 15-10 | 26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의 수준을 유형별로 평가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메타분석으로 건설공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불공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HP 기법(불공정 수준 평가지표 도출에 따른 분석)과 관련 종사자 설문조사(개별 행위의 피해규모, 지속성 조사) 수행
- AHP 기법과 IPA 분석을 활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
- 행위 유형 분석과 제도의 실효성 평가 결과 및 불공정 행위 유발요인 분석, 제도의 실효성 저하요인 분석,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

| 연구결과 |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공정 경쟁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적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사용

- 수주산업으로서의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 중 계약 이후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중심으로 검토

AHP 기법과 관련분야 종사자의 설문조사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 발주자-원도급자의 경우 '설계변경금액 미조정 등의 공사비 관련' 유형, 원-하도급자의 경우 '자가 하도급', 건설자재, 건설장비 임대업, 건설 근로자 등 생산요소와 관련해서는 대금 및 임금체불이나 낮은 가격 설정 등의 불공정성이 심각

불공정거래행위 유발요인 분석 결과, 피라미드 형태의 건설산업 구조,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제도적 한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이 결합하여 고질적 문제를 야기

제도의 실효성 평가 결과, 생산단계 전반에서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주자-원도급자 단계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및 지연공사 간접비 지급 제도, 원-하도급자 단계는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벌제도, 생산요소 단계는 자재대금 지급확인 등 예방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제도들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의 타당성, 집행성 관련 요인의 영향이 높음

미국의 anti-bid shopping 및 파트너링 프로그램, 일본의 '발주관계사무의 운용에 관한 지침', '건설업법령준수 가이드라인' 등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활용

| 정책제안 |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적 차원의 제도 개선

- 최저가 공사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지연공사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공사비 증액 요청 발생 시 처리결과 통고 규정 마련, 하도급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설참여자 간 거래관계 규정 정비, 대금지급 관련제도 정비, 대금지급보증제도 정비, 대금지급 보증제도 강화, 파트너링 확대 적용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집행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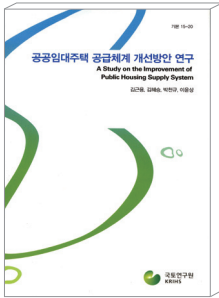
-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개선, 참여자별 처벌 및 제재조치 강화

제도 홍보 강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

- 불공정 방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공정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도입, 파트너링 제도 강화

건설공사 참여자 간 공정거래 여건 조성

- 자재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근로자를 포함하는 형태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발주자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발주자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Housing Supply System

연구책임 김근용 | 연구진 박천규, 김혜승, 이윤상 | 기본 15-20 | 162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계획, 공급, 배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 실태와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결과 |

공공임대주택의 법령체계 및 공급현황, 배분체계를 분석

- 2015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 체제로 개편을 통해 기존에 산
재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통합됨
- 2014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등록임대주택 재고의
68.9%인 117.7만 호임
- 무주택가구 여부와 가구 경제력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부여
하며 유형별로 상이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계획단계에서 공급 목표수준, 건설 및 취득 단
계에서 공급역량, 배분 측면에서 수요자특성의 비교분석 및 입
주자 편의 분석을 통한 공급체계 평가

-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2022년까지의 수요량은 공공임대주택 소요의 약 29%이며, 임
대차시장 안정 측면에서 연간 공급계획 목표가 적절한 수준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량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LH의 재무
여건 악화로 차질이 우려되며, 2014년 도입된 공공 임대리츠로
자금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같은 해 도입된 매입·전세임대주택
의 적정주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입주
대상가구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입주가구가 입주대상 가구
에 비해 주택시설, 주거환경, 임대료 부담, 소비지출, 주거 안정
등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편익을 대등변화로 측정한 결과, 장
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m^2 당 입주자편익은 임대주택 규모
제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연간 평균 6.4만 원, 규모제약이 없다
고 가정할 때 연간 평균 7.3만 원으로 추정됨

| 정책제안 |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공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계획수립, 건설 및 취득, 배분 과정
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평가체
계 구축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의 설정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소폭 축소, 지구계획 수정을 통한 미착
공 상태의 국민임대주택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 임대
리츠 및 뉴스테이 지구로의 조정 등을 통한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공급방식 조정

공공주택의 재무적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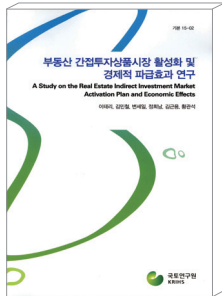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공공주택의 자기부담분을
5% 이내로 축소
- 재정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비중을 증대하고 기존 용자형태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투자형태로 전환
- 공공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향조정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명확한 처분조건 및 분양전환 등의 청산
구조를 마련하고 매각대금을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자금으로
활용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법체계 정비

-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 기존 추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전
정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방지
- 최근 재정비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입주
대상자를 감안한 체계적 보완 필요

공공임대주택 관련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영리기업, 비영리조직 등의 다양
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체계의 거버
넌스 체계 구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A Study on the Real Estate Indirect Investment Market Activation Plan and Economic Effects

연구책임 이태리 | 연구진 정희남, 김근용, 김민철, 변세일 | 기본 15-02 | 301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시장 및 제도 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그 역할이 미미한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효율화 유도를 목적으로 함

- 리츠와 부동산펀드 시장의 현황 · 관련 제도를 검토하며 기존 문헌, 관련법 제정,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을 토대로 시장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금융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의 효율성 여부를 진단 · 측정하고, 거시경제 파급효과와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

| 연구결과 |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이 비효율적임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가능 수준이 1조 2천억 원임을 측정을 통하여 도출함

- 리츠시장과 부동산펀드의 운영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비효율적으로 나타남

효율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

-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시장 규모가 10% 증가할 경우 실질GDP 0.016%, 건설투자 0.163%, 민간소비 0.006%, 취업자수 0.004%의 증가 효과가 발생함
-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최종수요 5천억 원 증가 시 생산 유발효과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5천 명, 임금유발효과 1,600억 원임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리츠 활성화 및 대형화, 투자대상 확대 및 다양화와 시장의 성숙도 제고 등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함
- 부동산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시장의 공모화, 부동산펀드 취득세의 감면혜택 등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안 |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 제도개선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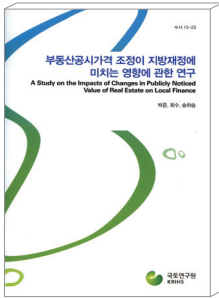
-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리츠 활성화 및 대형화,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세금 감면 혹은 비과세와 같은 세제혜택 강화, 투자대상 확대 및 다양화와 시장의 성숙도 제고 등 관련 정책 검토가 필요함

부동산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부동산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시장의 공모화, 부동산펀드 취득세의 감면혜택, 사모 부동산펀드 규제완화와 함께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서 균질화 강제, 유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이원화, 부동산펀드의 금전 차입 시 규제, 부동산펀드에 의한 부동산 직접 개발 시 문제점, 부동산펀드의 환매기간 조정, 부동산펀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환매금지형 부동산 펀드의 배당 소득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함

공신력 있는 자료의 축적과 정형화된 분석 수단을 이용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 효율성 검증이 필요함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피드백 작업을 수행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함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on Local Finance

연구책임 박준 | 연구진 최수, 송하승 | 수시 15-23 | 96면

| 연구목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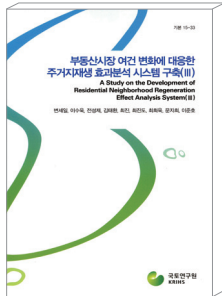
- 이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적으로 평활화될 경우 지역별·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 차이로 인한 부동산보유세의 변화와 지방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 가격공시제도, 과세표준, 부동산보유세 운영단위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지방재정 변화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결과 |

- 부동산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실거래가반영률이 현재 약 65% 수준에서 80~100%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세액은 총 2.0~4.7조 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은 총 0.5~1.2조 원으로 추산됨
- 이 경우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4.5~10.9% 증가하며 시, 군, 자치구 단위에서 각각 22.4~54.6%, 33.1~68.4%, 24.5~59.3%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지방세입은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1.5~3.6% 증가하며, 시, 군, 자치구 단위에서 각각 2.0~4.8%, 2.3~4.9%, 14.0~34.0%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제안 |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시 지역별·부동산유형별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로 인한 부동산보유세 변화로 지방재정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공동과세제도 등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다른 시·자치구 및 도·시군이나 전국·광역단체 단위로 확대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함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Neighborhood Regeneration Effect Analysis System(Ⅲ)

연구책임 변세일 | 연구진 이수옥, 전성제, 김태환, 최진, 최진도, 최희욱, 문지희, 이준호
| 기본 15-33 | 245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향후 주거지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책담당자에게 지역별 정비구역 현황, 부동산시장 현황 등 정보 조화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별 사업성과 재정착률, 부동산시장 파급효과, 국지적 부동산시장 변화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조화하고 시뮬레이션이 가능토록 지원함
-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주거지재생 관련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지원의 틀을 제공한 정책적 의의가 있음

| 연구결과 |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존 2차년도 연구결과인 주택시장 파급효과와 재정착률 분석 모형, 재정착률 모형, 사업성 분석 모형을 실제 현장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성 분석 모형은 기존에 개발된 모형이 실제 사업지에 적용 가능하도록 각종 수치 및 계산식 보완,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 시뮬레이션 기능 구축
- 재정착률 모형의 경우 적시성을 높인 모형으로 개선하였으며 시장파급효과모형은 기존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구시 시범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축

주거지 재생사업의 효과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가법모형(GAM)을 활용한 국지적 파급효과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모형과 연계한 통합분석모형(SSD)을 구축

- 분석 모형을 통해 공공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대구시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모형을 점검하고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역 실정에 기반하여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정책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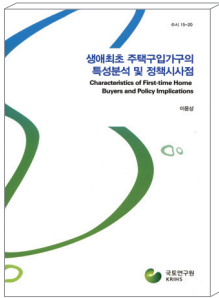
정책담당자들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거지 재생 관련 다양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거지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주거지재생효과분석시스템(HR-EAS)을 활용하여 주거지 재생사업의 효과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 및 주거지재생 정책 추진 가능

앞으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시스템의 정책적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전국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제도가 필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시범지역 확대와 더불어 모형과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수정 및 기능 개선작업이 필요하므로 국가 R&D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

- 추정분담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모형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Characteristics of First-time Home Buyers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이윤상 | 수시 15-20 | 6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걸린 기간에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여 자가소유 촉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와 임차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여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가소유 촉진정책에 시사점 도출

| 연구결과 |

중여, 상속 등의 주택마련 방법을 제외했을 때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걸린 평균기간은 7.6년이고 소요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집단과 소요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 등으로 양극화됨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걸린 평균기간은 6.9년이고, 중여, 상속, 기타의 주택마련 방법을 제외했을 때의 평균기간은 7.6년
- 가구형성 후 1년이 되기 전에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가구가 약 28%인 반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이 가구형성 후 10년 이상 걸리는 가구는 33%로 생애최초주택구입기간의 양극화되어 있음
- 생애최초주택 구입 소요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의 평균 소득은 대략 소득 6분위에 속하고 소요기간 10년 미만 집단의 평균 소득은 대략 소득 7분위에 해당함
- 2010년대에 가구를 형성한 가구만을 살펴봤을 때 생애최초주택 거주비용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데 소득 5, 6분위와 7, 8분위 사이의 차이가 13%p로 가장 크며 7, 8분위와 9, 10분위의 차이는 3%p로 비교적 적음

생애최초주택구입에 걸리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지역 특성으로 가구형성 시 가구주 나이, 대출 이상의 학력, 결혼 여부, 소득, 주택구입 자금 중 무상지원 및 대출자금의 비율, 주택을 구입하는 지역의 평균주택가격, 자동차 통근시간 등을 실증

| 정책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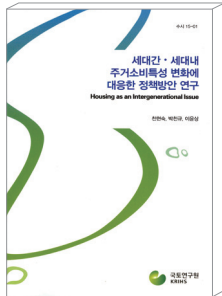
과거 정부에서 중산화가능계층으로 분류한 소득 5, 6분위 계층이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대상으로 여전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구주 나이 40대가 되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는 가구 역시 평균적인 생애최초주택구입 시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므로 가구주 나이를 고려한 대출우대 조건을 검토

저·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검토

- 현재 시행 중인 보증식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저렴한주택을 공급을 지원하여 도시외곽 지역에 대한 대안을 마련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Housing as an Intergenerational Issue

연구책임 천현숙 | 연구진 박천규, 이윤상 | 수시 15-01 | 73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세대 간·세대 내 주거소비특성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각종 문헌을 통해 세대 간·세대 내 관련 이슈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 연령대별 주거소비 특성과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세대 간·세대 내 이슈에 대한 분석을 주택가격 상승기와 안정기로 구분하여 접근
- 세대 간·세대 내 관련 현안에 대한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세대 간·세대 내 현안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성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결과 |

주택가격 상승기(2001~2006)와 안정기(2007~2012)로 구분하여 세대 간·세대 내 주거소비양상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가점유율이 낮아지고,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높아졌음

- 임차의 자가전환 비율은 2001~2006년에 비해 2007~2012년에 크게 낮아졌고, 특히 40대 이상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반대로 자가의 임차전환비율은 높아짐

가격상승기의 주택구입 자본이득은 40대 이상에서 향유, 안정기의 자본이득은 연령별로 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임

-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주택구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음

전세금은 40대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30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층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부담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주택구입 시 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20~30대가 높고, 이후 연령대에서는 크게 낮아짐.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아짐

- 부모로부터 주택구입 시 도움 여부는 부모세대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양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책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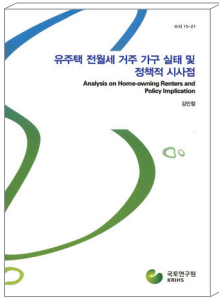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에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되며 세대 간 문제뿐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

청년층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을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원리금 상환금 소득공제 등으로 시세의 약 85~90%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주택구입 옵션 저축프로그램 도입 검토

- Key generation(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인 40대 이하 청장년층 세대로 정의)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일정 비율의 무이자 대출, 대출상환금 소득공제 등 실시

은퇴계층에 대해서는 지분형 역모기지 도입 및 가입대상의 확대 검토, 다양한 자산 유동화 방식 도입 검토

- 지분형 역모기지 도입 및 가입대상 확대, 다양한 주택자산 유동화 방안 검토 등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n Home-owning Renters and Policy Implication

연구책임 김민철 | 수시 15-21 | 64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 및 향후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것임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특성, 거주 주택의 특성, 그리고 보유 주택의 특성을 분석함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함

| 연구결과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안정되어가고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상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급격히 증가
-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상으로 2010년 이후 2014년 동안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비중은 2010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임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자발적으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선호에 따라 유주택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과 직장 이동 등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유주택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혼재되어 있음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가구와 주거 특성상 자가 거주 가구나 순수 전월세 거주 가구에 비하여 주거서비스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갖고 있는 계층으로 보임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소득이 높고 자녀수가 많고 교육비 지출이 높은 계층임
- 넓은 평수에 거주하며,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함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음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가 보유한 주택은 주로 임대료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자가 가구에 비하여 낮음, 따라서 자본이득을 염두에 두고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책제안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 주로 거주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한 수도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매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들이 거주하고 지역적 분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전월세 시장의 이상 변동에 대처하고 선제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자발적인 그룹과 비자발적인 그룹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실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하여 매입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고려 가능

- 자발적인 유인, 즉 자본이득을 감안하고 주택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거나 보유 주택에 다시 거주할 확률이 높아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그룹을 구분

- 양자를 구분함으로써 두 그룹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특성상, 주거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와 주택에 대한 자본 이득을 고려한 투자수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Public Construction Request Pursuant to the Bidding Method Research on Standard Agreement Terms

연구책임 이승복 | 연구진 이승훈 | 수시 15~19 | 85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 발주의 입찰·계약 단계에서 설정하는 계약조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입찰방법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로서 「공공공사 입찰방법별 표준계약조건」을 제시하고자 함

이에 공공건설사업의 입찰방법별 입찰·계약의 형태와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이들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표준계약조건을 마련하여 모든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공정한 계약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구결과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근원은 발주기관의 부당 특약이나 내부지침 등 공공공사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계약에 기인하는 바가 큼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방법별 표준계약조건 정립'을 통해 건설 산업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표준계약기준은 현행 「국가계약법」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단일 계약 체계를 '입찰방법에 의해 달라지는 건설업체의 설계·시공 책임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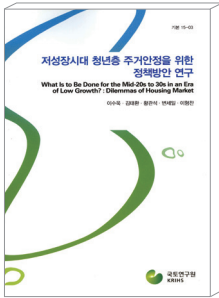
- 계약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설계시공분리입찰(Design-Bid-Build)과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로 구분하여 표준계약조건 정립
- 입찰방법별 표준계약조건, 시설공사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발주기관들이 현장설명서, 입찰요시서, 설계서에 부당 특수조건 설정 금지제도 마련

| 정책제안 |

일률적으로 체결되어온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공공공사 입찰 방법별로 마련된 표준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으로 배제

국토교통부 "공공건설사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로 발주기관의 부당 특수조건 설정 근절

발주기관 불공정관행의 근절 방안으로 발주기관의 불법 또는 신규 특수조건의 상부기관 승인, 부당 행위 신고를 위한 부당계약신고센터 설립 등 제도 개선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What is to be Done for the Mid-20s to 30s?: Dilemmas of Housing Market

연구책임 이수욱 | 연구진 김태환, 황관석, 변세일, 이형찬 외 | 기본 15-03 | 225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주택구매력 악화와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정책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음

- 청년 주거불안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과거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나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청년층 내 주거소비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지 주거소비실태 분석을 통해 제시
- 청년층의 주택점유형태 변화 정도와 원인 탐색, 주택수요량 결정요인, 부담 가능한 주거비 수준을 분석하고, 청년층을 지속가능한 유효 주택수요층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연구결과 |

25~39세에 해당하는 청년 가운데 고용과 소득 변화로 25~34세 연령에서 전세와 주거면적 소비가 큰 폭 감소하였고, 월세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였음

- 25~34세는 필요경비 지출이 저축보다 더 많음. 주택점유형태 결정의 기본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구 매력으로 이어지는 저축상품을 개발
- 지역적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층의 주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큰 만큼,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지역의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금융위기 이후 주택점유형태와 주거소비 결정 시 소득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순자산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점유형태와 자가 거주 주거면적 결정에 자본이득의 크기를 반영한 상대주거비용이나 자가 거주 사용지비용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살펴본 결과,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등에 거주하는 25~34세의 중·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 소득 및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층이 접근 가능한 적정한 주택가격은 수도권 3.8억 원~3.0억 원, 비수도권 3.5억 원~2.8억 원이며, 이들 가격대의 재고가 서울 56~41%, 경기 84~73%, 부산 92~79% 수준에 불과해 저렴한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함

| 정책제안 |

저성장시대 청년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중심의 단기적 전월세대책보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과 자가 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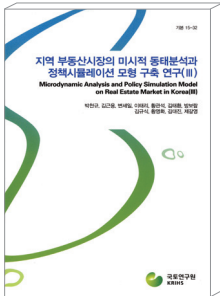
- 점유는 소유와 동시에 거주함을 의미. 청년층의 자가점유 확대를 위해 사회진입 이전 혹은 진입 초기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자립형 자산형성 상품'을 개발
-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장기 주택마련저축 재도입, 주택대출이자 납부보험 등 '저축+보험 연계 상품' 개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포괄적 중장기 기본구상을 마련

- 배려대상이 아닌 주택수요 주체로 청년층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용직과 비상용직, 기혼과 미혼, 1인 가구와 2~3인 가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장기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
- 청년의 장래 소득수준에 맞는 가격대의 주택 공급을 확대.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에는 25~34세의 중간소득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

회수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추진

- 청년공동체에 의한 주택공급 지원, 시민단체 및 청년공동체 등의 도시정비사업 참여방안 마련, 시장 위기에 대응한 지역별 청년주택펀드 조성, 정례적 청년 주거실태조사 실시
- 이를 제도화하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거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 추진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Ⅲ)

Microdynamic Analysis and Policy Simulation Model on Real Estate Market in Korea [Ⅲ]

연구책임 박천규 | 연구진 김근용, 변세일, 이태리, 황관석, 김태환, 방보람, 김규식, 황명화, 김대진, 제갈영 | 기본 15-32 | 272면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부동산시장 분석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미시적, 지역적 분석과 더불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을 융합한 종합적 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부동산시장을 미시적, 지역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거시적 측면의 분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연구결과 |

미시적·지역적, 거시적 분석을 포괄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종합적 분석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몇 가지 부동산시장 현안 분석에 적용

거시적 분석의 도구인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거시계량모형은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구조모형과 동태적 확률일반모형(DSGE)으로 구분하여 개발

부동산시장에 대한 미시데이터인 부동산시장패널조사를 생산, 전년도 1차 예비조사에 이어 제2차 예비조사의 설계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

주택거래의 공간적 특성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주택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매매거래, 전세거래의 미시적, 동태적 특성을 분석

| 정책제안 |

향후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거비용, 구매력 등 시장 참여자의 행태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방안을 도출할 필요

주거지 재생이 주거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와 더불어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

주택금융정책의 변화로 가구의 차입제약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체가능성이 낮은 거주용도 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선별적 금융 지원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

공간적인 기반에서 주택시장권역을 설정하는 방법과 주택수요 분석 방법론을 연계한 주택수급분석 필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매매-전세-월세 간의 유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저렴주택에 대한 구입지원 확대, 월세에 대한 주거비용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전세가격의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은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바,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로 인한 임차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월세와 전세의 평균투자수익률이 상승할 때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공급자 입장에서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

주택시장의 급격한 금등락은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

지역 간 주택거래의 흐름은 가구특성별로 상이한 바, 이를 감안한 주택공급 및 재고관리, 가구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

4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대도시권 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둘째,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김호정 |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고용석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과정 수료

오성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이상건 | 선임연구위원 | 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

이춘용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김흥석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정진규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학 박사

임영태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이백진 | 연구위원 | 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김종학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김준기 | 연구위원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김혜란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윤서연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교통) 박사

배윤경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육동형 | 책임연구원 | Utah State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김광호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통공학 박사

최재성 | 책임연구원 |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교통경제학 박사

박종일 | 책임연구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김상록 | 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도로계획, 교통계획

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ITS, 교통계획

스마트시티 설계, 교통시스템 계획

도시교통계획, 지역계획,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교통계획, 생활교통

교통 및 토지이용, 도시·광역교통정책, 계획이론

지역교통, 물류계획

ITS, 교통계획

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활동기반 통행행태분석, 인프라 투자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 모델, 시공간분석

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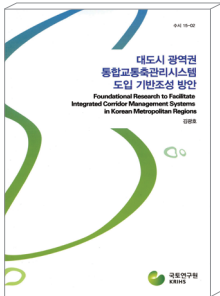
Traffic, Transit Assignment, 대중교통요금산정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계획, ITS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Foundational Research to Facilitate Integrated Corridor Management Systems in Korean Metropolitan Regions

연구책임 김광호 | 수시 15-02 | 88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첫째, 국내 대도시 광역권의 실제 교통축을 상정하여 통합교통축관리(Integrated Corridor Management, 이하 ICM)를 위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둘째, ICM 도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계획체계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CM은 대도시권의 각 교통축을 이용하는 통행자들이 동적으로 경로 및 수단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이하 ITS)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지향하는 교통관리체계임

| 연구결과 |

미국의 ICM 추진 사례검토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관련 연구 개발사업의 요구사항이 파악됨

-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ICM에 대한 기초연구, 시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 ICM 연구개발에는 세부 시스템들 간의 운영 연계를 위한 시스템 공학적인 접근법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ICM의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광역권교통계획 체계의 개선 요구사항이 파악됨

-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ITS 계획 등이 ICM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 계획들은 ICM 관점의 반영을 위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음(예: 교통 운영 측면의 분석 강화, 광역권 차원의 조정 및 연계 기능 확대)

‘대전-청주’ 축에 대한 ICM 도입의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축의 교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안됨

- 제안된 전략들은 ① ITS 정보 연계의 개선, ② 네트워크 결절점 및 물리적 연계지점에서의 운영 효율성 개선, ③ 경로 및 수단 전환 활성화, ④ 교통축 용량 증대 및 수요 관리임

| 정책제안 |

ICM 연구개발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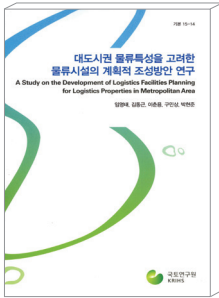
- 중앙정부 주도로 ICM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ICM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함

ICM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광역교통계획들의 역할 재정립

- 해당 광역교통계획들은 개별 ICM의 방향 설정을 안내하고, ICM 사업들 간의 광역 차원의 조정을 수행함
- 개별 ICM을 통해 도출된 현황 분석 결과 및 운영 전략 등을 상향식으로 해당 광역교통계획들에 반영함

축 시스템 관리계획 도입 및 관련 재정지원체계 확립

- 주요 교통축들에 대한 축 시스템 관리계획의 의무화, 이를 지원하기 재원 확보를 관련법에 명시함으로써 ICM 사업 추진의 위험 부담을 줄임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Planning for Logistics Properties in Metropolitan Area

연구책임 임영태 | 연구진 김동근, 이춘용, 구민상, 박현준 | 기본 15-14 | 19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도시권 물류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물류시설의 수요추정과 입지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련 법·제도 및 데이터베이스(DB) 조사방법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대도시권 물류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대도시권 물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품목별 물류시설의 수요추정과 입지중요도를 고려한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정책적 측면에서 대도시권 물류의 특성에 맞는 대도시권 물류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물류정책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 그리고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조사방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함

| 연구결과 |

품목별로 차별화된 대도시권 물류시설 배치전략이 필요함

- 대도시권 물류의 품목을 특정 지구에 한정하여 배치하는 것보다 품목 특성과 수요에 따라 수도권 내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품목에 따라 지역별 시설수요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품목에 맞는 적정 물류시설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수도권 품목별 물류시설의 입지중요도에 따른 전략적 배치 필요
- 수도권 품목별로 입지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신선식품, 음식료품 및 의류, 인쇄 및 출판물 등을 취급하는 일반소비재 물류시설은 서울강서, 구로, 동작,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과 경기광명, 부천 그리고 인천부평구 등의 입지여건이 우수하게 나타남
 - 수도권 품목별 입지 중요도(시설배치 우선지역)는 품목별로 수도권 내 각 시·군·구의 운송접근성(운송거리 최소화), 임대 용이성(저렴한 지가), 인력 가용성(물류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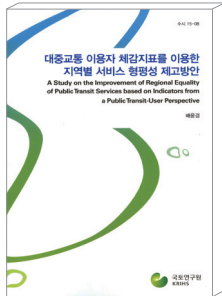
| 정책제언 |

국가단위 물류기본계획과 시·도단위 물류기본계획 간의 간극(gap)을 조정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한 대도시권 물류 기본계획 수립

- 기존의 국가 물류계획과 시·도 물류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물류 특성과 산업지원 대책을 대도시권 물류 기본계획에 수립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
- 대도시권 물류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주체는 중앙정부 단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입안, 지방정부 간 공동 수립 등 국가와 지방의 협력이 필요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물류단지 개발지침 보완

-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대도시권 물류시설 개발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규정 보완
 - 기존 물류시설의 재활용과 관련한 도시계획과의 연계제도 도입
- 대도시권 물류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고, 조사범위와 조사주기 등을 명시할 필요
- 냉동/냉장 보관시설까지 보관시설 세분화 및 운송수단 구분의 다양화가 필요
 - 현행 KTDB의 최소 지역단위인 시·군·구보다 더 세분화된 읍·면·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ional Equality of Public Transit Services based on Indicators from a Public Transit-User Perspective

연구책임 배윤경 | 수시 15-08 | 114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실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지역별 대중교통비용 지출과 통행속성(비용, 시간 등), 만족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단 및 평가하고자 함

- 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수준과 이용자의 소득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인프라 서비스의 형평성 측면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대중교통인프라 불균형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방향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결과 |

대중교통이용지출자료를 이용하여 형평성 지표를 제안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중교통 형평성의 개념 제안과 지표개발의 성과가 있음

이용자의 소득효과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따라 다르게 체감하는 효과를 지표에 반영하였으며, 형평성 평가를 진행하여 수직적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분석을 하였음

개발된 형평성 지표와 교통비용 감당능력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대중교통서비스 형평성을 평가하였으며, 불균형 지역을 파악

- 형평성 지표의 지역별 비교는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지역들을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계층 분류에 사용된 방법은 잠재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하였음
- 계층은 서울시, 광역시,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통행시간은 고밀도지역이 가장 길며, 접근시간은 저밀도지역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교통비 감당능력(affordability)지표 분석결과, 저밀도 지역과 서울시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소득에 비해 교통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형평성 측면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과 개선방안들을 제안함

| 정책제안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제시 및 체계 구축

- 동일한 서비스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것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이용자 측면의 평가 체계가 필요함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별, 이용자별 특성 분석, 빅데이터와 조사 데이터 활용 및 지속적 자료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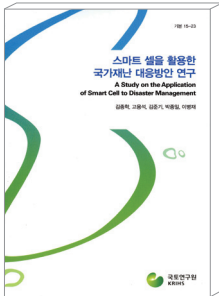
이용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체계 정착을 위한 이용자 측면의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고려

노선 조정 및 가격 체계 개편 시 이용자 맞춤형 정책 제시

- 단순히 수요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노선을 선정하고, 이용자 패턴분석에 기반한 가격체계 구성이 필요함

교통비용 관련 지수 개발 및 관련 자료 축적

- 교통비용은 가계지출의 두 번째 큰 비용으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소득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및 정책제시가 필요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mart Cell to Disaster Management

연구책임 김종학 | 연구진 고용석, 김준기, 박종일, 이병재 | 기본 15-23 | 116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재난발생 전후에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관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고, 재난분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전국 단위, 구 단위, 초고층 건물, 대피로 계획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재난 유형별 · 단계별 활용방안을 제시함

| 연구결과 |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잠재적 요구조자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의 활동인구 정보는 이러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임

모바일 빅데이터와 재난의 시공간적 특징을 고려해 재난의 유형을 구분하고 재난관리 단계별 활용가능성을 개념적으로 검토함

사례 분석에서 모바일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연계하는 시각화 작업을 통해 재난분야에서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도출함

종로구 폭염, 강남역 침수 등의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바일 빅데이터의 요구조사 위치와 규모 정보는 실시간 대피현황 파악, 대피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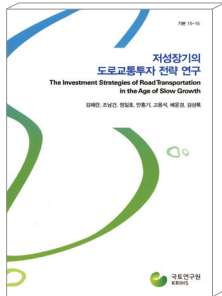
| 정책제안 |

재난관리 정책은 기존 시설물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위험에 노출된 인명관리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스마트 셀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를 재난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활동인구 집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는 이 시스템의 실천계획으로 적용 가능할 것임

모바일 빅데이터는 성별, 연령별 활동인구 정보도 제공 가능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난대책 수립에 활용 가능함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자체 등의 각 기관이 공유재난 정보로 활용한다면 국가재난 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임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The Investment Strategies of Road Transportation in the Age of Slow Growth

연구책임 김혜란 | 연구진 조남건, 정일호, 안흥기, 고용석, 배윤경, 김상록 | 기본 15-15 | 137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저성장기의 여건변화하에서 교통에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도로투자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저성장기의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부문의 변화 전망과 교통의 핵심적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를 진단
- 장래 저성장으로 인한 교통수요 및 행태 부문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도로투자 정책을 제시함

| 연구결과 |

저성장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성장 정체 및 감소 등 '인구 저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 및 세수감소 등 재정악화와 관련된 '경제 저성장'을 의미

- 인구 저성장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파급영향에 주목하여 장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기존의 도로투자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투자, 간선도로 중심 투자, 건설 중심 투자였으나, 질적 성과 진단분석을 위하여 도로투자의 달성목표를 선정하여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의 적합한 지표로 분석함

- 이동성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지역 간 통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경기권의 고속도로는 잦은 혼잡이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성 부문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많고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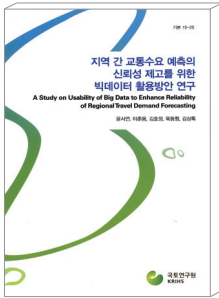
장래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2040년까지 총 인구의 증가가 미미하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총 통행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여가통행 증가 등의 총 통행수요 증가 요인 또한 존재하여 이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총 통행량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제안 |

저성장기 도로교통투자 전략으로는 간선도로의 선택과 집중적 건설 투자 및 재원 다각화, 대도시 도로 혼잡개선에 관한 국가 역할 강화, 도로와 대중교통의 상생발전, 관광지원도로 확충, 체계적인 도로자산관리 체계, 고령보행자 및 고령운전자 사고저감 시설 및 운영기술 확충 등으로 도출됨

이에 따른 정책방안은 수도권, 광역권, 지방권역별 단기, 장기방안으로 구분하여 도출함

- 수도권은 집중되는 인구와 광역화되는 통행패턴으로 인하여 고속의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인프라를 공급하여야 함. 이때, 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 활용 등 재원조성 다각화를 우선 검토함
- 광역권은 혼잡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강화를 통하여 혼잡·광역도로 건설을 촉진하여야 함
- 지방권은 국가간선도로가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간선서비스를 공급하되 규모 부분을 재검토하여 효율화하여야 하며, 관광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원 도로 건설 등을 검토하여야 함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Usability of Big Data to Enhance Reliability of Regional Travel Demand Forecasting

연구책임 윤서연 | 연구진 이춘용, 김호정, 육동형, 김상록 | 기본 15-25 | 13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교통수요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지원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결과 |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 시스템(Toll Collection System: TCS)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간 통행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교통량의 추정에는 주중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말, 연휴기간 통행이 이와 큰 차이가 날 경우 도로인프라 계획은 실제 교통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 고속도로 통행데이터는 수도권권을 출발하여 각 톨게이트에 도착하는 교통량이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 주말, 연휴기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줌
- 이와 같이 시기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실측값을 국가교통 DB의 O/D와 비교하여 연중 발생하는 오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TCS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침투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행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서는 전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제시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며, 지역별도로 통행특성이 달라 실측치를 바탕으로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 TCS 자료를 기반으로 부산, 울산, 대전광역시의 진출입별 집중률을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은 규정된 집중률, 지속시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통행 패턴을 고려하여 도로 사업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이동통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주말계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주말계수의 산정에 활용하고 있는 TCS 자료는 수도권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동통신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상세 분석을 실시함

- 서울로 유입되는 통행의 주말패턴을 경기 및 인천지역에서 출발한 통행과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출발한 통행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서의 주말통행 증가와 감소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연구에서 토지이용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면 더 상세한 교통수요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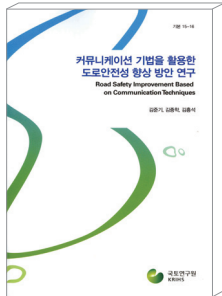
| 정책제안 |

본 보고서의 주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요일·지역별 동적 통행특성을 반영한 국가교통 DB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자료와 관련 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함
- 도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편익 산정 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침투·비침투 지속시간에 대해, 현행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자료 등의 실측치를 활용한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함
- 시공간적 해상도가 높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국가교통 DB의 주말계수를 실측치를 사용해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간적 정밀도를 높여 토지이용과 통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 활용 및 민간 데이터 유통 등에 관련된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 빅데이터의 위상 제고: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 빅데이터의 역할 강화 필요
- 민간 데이터의 공공목적 활용모델 구축: 민간 빅데이터를 공공목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 필요
- 빅데이터 유통체계 및 활용기반 마련: 빅데이터의 통합 제공 및 공동이용환경 구축으로 빅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Road Safety Improvement based on Communication Techniques

연구책임 김준기 | 연구진 김종학, 김흥석 | 기본 15-16 | 16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한 통행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도로안전 개선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캠페인 등이 인적요인의 안전성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개선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요소와 실제 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도로 안전정책을 제시함

| 연구결과 |

교육, 홍보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한 운전자요소의 문화, 교육, 안전의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커뮤니케이션 기법별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개별 방식(19.2% 감소), 방송매체(12.6% 감소), 교육(1.2% 감소), 계시물(1.2% 감소) 순으로 나타났음

커뮤니케이션 기법별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마련이 필요

- 관련 연구 233건 중 우리나라의 연구는 8건(3.4%)에 불과하며, 통행행태를 변화시키고자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많은 관련성이 있음

실제 교통사고와 도로이용자들이 느끼는 위험지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도로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하는 사전적 도로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필요

| 정책제안 |

통행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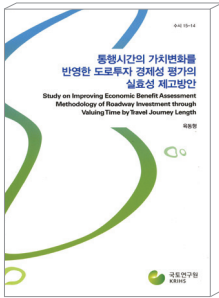
- 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키우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인식 증대 필요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특정 위험행동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도입 필요
- 이타적인 행동, 생명의 가치, 위험한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 등 긍정적 감정에 기반을 둔 교육이나 캠페인 필요
- 어린이, 부모 및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안전교육 필요

법적 규제와 동반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적용 필요

- 도로교통안전 향상을 위해서 WHO(2013)는 속도 제한, 음주운전 금지, 안전벨트 착용, 유아안전시트, 안전모 착용을 강제화하는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 필요

교통사고자료와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도로안전성 향상 사업 수행 필요

- 사후적 대책과 사전적 대책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도로안전 개선사업 가능
- 도로이용자들이 느끼는 위험요인을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 데이터(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방안 마련 필요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Study on Improving Economic Benefit Assessment Methodology of Roadway Investment through Valuing Time by Travel Journey Length

연구책임 육동형 | 수시 15-14 | 83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도로투자사업 평가에서 고정된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던 방법론을 지양하고, 경로정보를 이용하여 도로투자 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목표를 추진하고자 함

- 첫째, 통행시간절감편익에 관련된 여러 이슈 중 통행시간 가치와 통행소요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집중 검토
- 둘째, 경로정보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절감편익 산정에 통행소요시간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적용
- 셋째, 사례 연구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기존의 편익 분석과 제시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의 비교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 수립

| 연구결과 |

연구의 의의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기존 방법보다 통행시간절감편익이 얼마만큼의 향상 혹은 감소로 이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의 현상을 더욱 명확히 모형화하고 그 적용을 통해 통행시간절감편익 산정의 현실성을 향상시켰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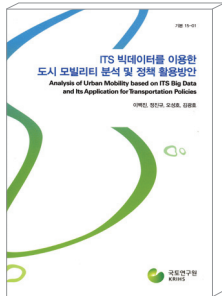
통행소요시간별 통행시간가치의 적용 결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행소요시간별 통행시간가치를 통행시간절감편익 산정에 적용한 결과, 통행소요시간별로 증가하는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시간절감 편익이 기존의 방법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항상 기존 방법보다 높은 편익산정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정책제언 |

통행소요시간별 통행시간절감편익의 반영

- 도로투자사업으로 인한 편익 산정의 증진을 위해 새로운 편익 항목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편익산정 방법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임
-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의 방향처럼 기존 편익산정 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편익산정의 정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이를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행소요시간별 통행시간가치가 도로 투자의 편익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통행소요시간별 통행시간가치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증감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Analysis of Urban Mobility Based on ITS Big Data and
Its Application for Transportation Policies

연구책임 이백진 | 연구진 정진규, 오성호, 김광호 | 기본 15-01 | 115면

| 연구목적 |

최근 도시모빌리티 평가를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하 ITS)로 실시간 수집되는 교통정보 데이터(즉, ITS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주목

- 그러나 국내에서는 IT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도시의 교통 정책 및 계획의 수립, 효과평가 등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모빌리티 분석과 교통정책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국내 ITS 빅데이터의 교통 정책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연구결과 |

ITS 빅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고, ITS 빅데이터 기반 도시 모빌리티 평가지표 제시

ITS 빅데이터의 교통정책 활용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은 시공간적 집계단위를 달리하면서 ITS 빅데이터를 분석해 활용가치를 실증

- 도로 모빌리티 분석: 대전시 전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링크별 이동성 및 신뢰도 평가와 병목지점에 대한 상세 분석 수행
- 대중교통 모빌리티 분석: 특정 도로구간의 승용차와 버스의 구간통행속도 비교와 버스 통행속도 분포에 대한 상세 분석 수행
- 도시 간 모빌리티 비교: 주요 교통축에 대해 혼잡심각도와 혼잡 지속시간 평가

ITS 빅데이터 교통정책 활용방안으로 세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

- 도시모빌리티의 기본평가지표인 교통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수집범위도 도시의 주요 교통축들은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확대
- ITS 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지표를 이용하여 정부의 교통투자, 전략수립, 환경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필요
- 첨단교통정보센터를 통해 ITS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모빌리티를

평가하고 월간(또는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관련 지침 마련
과 표준화된 평가지표 마련

| 정책제안 |

기존 첨단교통정보센터의 역할 재정립

- 국내 첨단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책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교통부서(예: 도로정책, 대중교통정책, 복지정책 등)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

순차적인 ITS 빅데이터 운영·관리 체계 도입 추진

- 지자체 첨단교통정보센터에 ITS 빅데이터의 운영·관리 체계를 도입할 때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여 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순차적인 도입이 필요

ITS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모니터링 분석 툴 개발·보급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모빌리티 지표들을 자동적으로 산출·보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툴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확대 필요

중앙정부의 ITS 빅데이터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표준과 ITS 설계 지침 마련

- 도시 또는 국가차원의 ITS 빅데이터 활용측면에서 자료 저장 구조 표준화 시급
- ITS 빅데이터 활용을 고려해 설계단계부터 센터의 DB구조, 장비 용량, S/W구조 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표준화된 ITS 설계지침 마련

5 국토정보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분석 등을 위한 방법·정책·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지자체 공간정보 추진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둘째, 국토 관련 데이터 수집, 생산 및 분석방법 연구, ICT 등 유관기술과의 융복합 활용방법,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 기술, 원격탐사,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KOPSS), 공간빅데이터, 동적인 시공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이 있다.

연구진

김미정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김대중 | 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사공호상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정문섭 | 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박사

박종택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임은선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이영주 | 연구위원 | Keio University 미디어·거버넌스학 박사

강혜경 | 연구위원 | 부산대학교 지형정보공학 박사

조춘만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서기환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황명화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임용호 | 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GIS, RS, 공간정보 정책, 그린&스마트 시티

국토정보화, GIS정책

공간정보정책, 공간정보인프라

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 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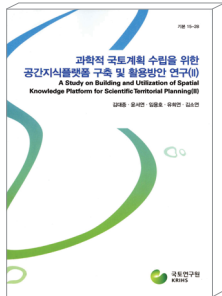
공간정보정책,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플랫폼, 공간 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도시계획을 위한 GIS/IT 응용전략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공간분석용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공간 빅데이터 프로세싱, 공간분석

공간정보분석, 공간구조탐색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 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II)

A Study on Building and Utilization of Spatial Knowledge Platform for Scientific Territorial Planning(II)

연구책임 김대중 | 연구진 임용호, 윤서연 | 기본 15-28 | 104면

| 연구목적 |

국토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공간지식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보기술이 무엇인지, 그러한 정보기술을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

- 국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공간지식이라고 할 때, 이러한 공간지식은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창출되는지
- 공간지식 창출과정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정보기술은 무엇인지
- 이러한 정보기술을 어떻게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연구

| 연구결과 |

콜레라 전염병 확산방지, GIS를 활용한 제주도 중산간지역 토지 이용계획 수립, 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선정 등의 공간 지식창출은 수작업에서 정보기술 활용으로 발전

- 자료수집과 가공 및 분석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와 분석도구 등을 제공하는 공간정보기반의 플랫폼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

DIKW(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모형과 SECI(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및 지식생애주기모형을 결합한 공간지식창출모형 정립 및 공간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보기술 정의

- 데이터에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통계와 차트, 지도 등의 시각화가 필요하고, 정보에서 지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보와의 융합 및 시공간패턴분석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필수임

공간지식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 기술, 분석도구, 소통기술 및 협력적 지식생산 및 공유기술 등의 연계통합모형 정립

-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자료를 기존 자료와 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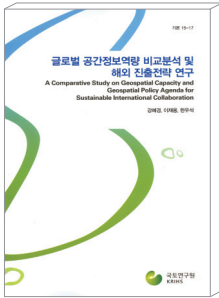
연계통합모형의 구축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나리오분석과 새로운 로드맵 제시

| 정책제안 |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공간지식플랫폼 구축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국토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공간지식플랫폼을 활용하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

- 「국토기본법」의 「국토조사」를 확장하여,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여 어떻게 진단해야 하고, 무엇을 근거로 정책대안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마련
- 통계자료와 공간자료를 융합하여 새로운 공간자료를 생산한 경우, 원시자료 생산자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유통하고 재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요와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공간지식 플랫폼의 기반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연구수행 필요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Geospatial Capacity and Geospatial Policy Agenda for Sustainabl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연구책임 강혜경 | 연구진 이재용, 한우석 | 기본 15-17 | 156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생산·공유·활용하는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정보역량을 조사하는 틀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공간 정보역량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 개발도상국이 보유한 공간정보역량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존재하는 공간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업들이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정책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연구결과 |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역량 조사결과 공통적으로 공간정보 기술역량이 절대적으로 취약했고, 공간정보 공유역량과 기반역량은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생산역량과 활용역량은 일정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개발도상국이 계속 공유 및 기반역량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비용증폭 등의 문제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국제협력이 필요함

개발도상국은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초청연수와 원조자금에 의한 국제협력사업, 국제협력활동(국제포럼,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자국의 공간정보역량을 배양하고 있었음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은 협력상대국의 '역량 개발'보다는 '공간정보사업'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사업을 완료하면 협력도 종료되어 지속적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확산에 한계가 있음

- 단편적인 공간정보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를 계속 창출시키는 선순환적인 국제협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정책제안 |

공간정보 국제협력계획 마련

- 정부는 공간정보 국제협력 정책비전, 전략을 비롯하여 공간 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
- 공간정보 국제협력계획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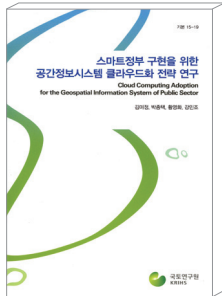
공간정보 국제협력 조직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 글로벌 공간정보 정책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수 있고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을 '공간정보 국제협력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간정보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총괄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16조는 공간정보 국제협력 정책수립 및 추진, 국제협력 지원기관, 예산 지원, 기관의 지정 및 해제를 명시

글로벌 공간정보 인력양성

- 국제기구 인턴십 및 파견, 개발도상국 정책컨설팅 등 전문가 수준별로 차별화된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Cloud Computing Adoption for the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of Public Sector

연구책임 김미정 | 연구진 박종택, 황명화, 강민조 | 기본 15-19 | 138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스마트 사회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간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에 따른 클라우드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배경과 고려사항, 관련 정책 및 구축 사례 등을 조사 및 분석함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의 문제점, 환경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함
- 유형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도출 및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함

| 연구결과 |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비용절감 방안으로 도입 및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함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인프라형 서비스(IaaS), 플랫폼형 서비스(PaaS), 소프트웨어형 서비스(SaaS)로 나누어지며,
- 기관 내부에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외부의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나누어짐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시 도입방식, 도입대상 업무 및 서비스, 정보공개 가능성의 여부, 서비스 품질, 안전 및 사후 대응 조치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하여 중앙 및 지자체의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전환전략을 수립함

- 개발 및 운영환경이 동일한 표준형 공간정보시스템, 표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자체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확장형 공간정보시스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정 및 확장한 독립형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짐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로드맵 구축과 기반 제도정비가 필요함

| 정책제안 |

독립형, 확장형, 표준형 공간정보시스템에 적용가능한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모델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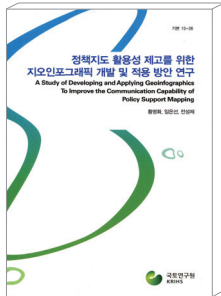
- 독립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인프라 기반, 확장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플랫폼 기반, 표준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이 구현되어야 함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및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함

- 공간정보 관련 단위 업무, 표준화, 데이터셋 정의 등 기반환경 조성,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프레임워크 설계 및 구축,
- 공간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을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함

- 공간정보 부문의 IT자원 통합, 거버넌스 차원의 클라우드 전담 조직 등 조직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보 보안 및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 공간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에 필요한 표준 및 기술개발 등 기반마련을 위한 관산학연 협력체계와 중앙 및 지자체 간 행정기관 협력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조직 등의 추진체계가 필요함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f Developing and Applying Geoinformatics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of Policy Support Mapping

연구책임 황명화 | 연구진 임은선, 전성제 | 기본 15-26 | 144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국민 소통 지원도구로서 정책지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도에 담긴 다채롭고 복합적인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지오인포그래픽의 개발방법을 정립하고 정책지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책지도의 구축 및 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정보 소통 측면에서 현행 정책지도의 시각화 관련 이슈를 진단함
- 정책지도에 담긴 다양한 위치기반 정보를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는 지오인포그래픽 방법의 개념적 틀과 적용절차를 제시하고 시범 제작함
-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지도 제작실무 적용방안, 정책적 활용 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도출

최근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대국민 소통 지원을 위해 정책지도 제작이 활발하나, 정보소통은 공공데이터 및 정책지표의 공유 수준에 머물러 정보소통 역량 강화 필요

-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정책지도는 현안진단, 대안 도출 및 시행 지원을 위한 실증분석 도구로 활발히 활용되나 지도공개 이외의 대국민 정보소통을 위한 이용은 거의 부재
- 전문가조사에 따르면 정보의 시각적 표현, 콘텐츠 구성·제시 등에 대한 지식/가이드가 부족하며, 인포그래픽 등과 같은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정책지도의 연계·융합 필요

지오인포그래픽은 위치기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인포그래픽으로, 지도, 차트, 그림, 스토리텔링, 인터랙션 등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정책적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

- 지오인포그래픽은 정보전달 의도의 명확성, 정보표현의 다양성과 정확성, 정보에 대한 사용자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며, 기획-자료수집-이야기줄기 만들기-이야기 콘텐츠 만들기-홍미요소 더하기의 5단계를 거침

주거복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방법을 시범 적용해 본 결과, 본 연구의 제안방법은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가이드로서 충실히 작동

- 지오인포그래픽 제작에 있어 동일 정보라도 정보전달 의도와 타깃 사용자에 따라 시각적 표현과 의미부여를 달리하고, 인터랙션 장치는 사용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지도 제작실무 적용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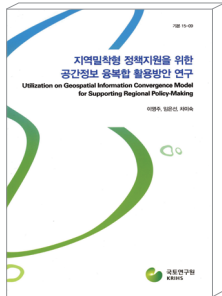
- 지오인포그래픽을 정책지도 제작에 활용하려면 수요조사 및 기획부터, 데이터 수집·가공, 시공간 분석, 시각화 및 정보소통의 단계를 거쳐야 함
- 협의체(또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자료공유 및 수집체계 마련, 자료가공 처리와 분석, 지오인포그래픽 제작·활용, 결과물 공유 등 실무수행 틀의 정립 필요

지오인포그래픽의 정책적 활용 방향 제시

- 지오인포그래픽은 국민과 소통하기 쉬운 정책관련 정보전달 도구로, 정책현안 진단부터 과제발굴 및 자원배분의 근거제시 자료로, 정책성과의 평가-홍보-피드백 지원수단으로 활용 가능

지오인포그래픽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 정보공유와 방법론 확산을 위한 산·학·관·연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 작성 인력, 지침, 업무 매뉴얼 개발 등 제도적 활용여건 조성
- 지오인포그래픽 기법 고도화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 지오인포그래픽 및 정책소통 관련 훈련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Utilization on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Model for
Supporting Regional Policy-Making

연구책임 이영주 | 연구진 임은선, 차미숙 | 기본 15-09 | 160면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분석도구로서 공간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실증적 지역밀착형 정책지원 기반 구축을 도모

- 지역 특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도구로 공간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을 발굴·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 연구결과 |

공간정보는 지역분석의 기초단계에서 지역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정책 컨설팅(consulting)의 효과적 지원도구로 활용 가능

-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도구로서 공간정보는 과학적 지역 진단 도구, 협력형 정책 촉진 도구, 효과적 정보융합 도구의 역할을 수행

데이터 기반의 지역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 진단부터 대안 설정, 사전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대안 평가, 정책 실행 후의 모니터링까지의 지역계획 수립 프로세스별로 공간정보의 도입 및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과제를 발굴하여-해결책을 찾기까지 다양한 행정자료, 통계자료, 기타 비정형 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융합 활용하고, 그 결과가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데이터, 도구, 사람, 제도적 기반이 필요

지역밀착형 정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정책지원, 문화관광 정책지원, 복지시설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모델 시범 개발 및 적용

- 활용 대상영역 및 목표,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방법론, 적용 가능 업무 등 공간정보 활용대상 및 방법 등을 정리

| 정책제안 |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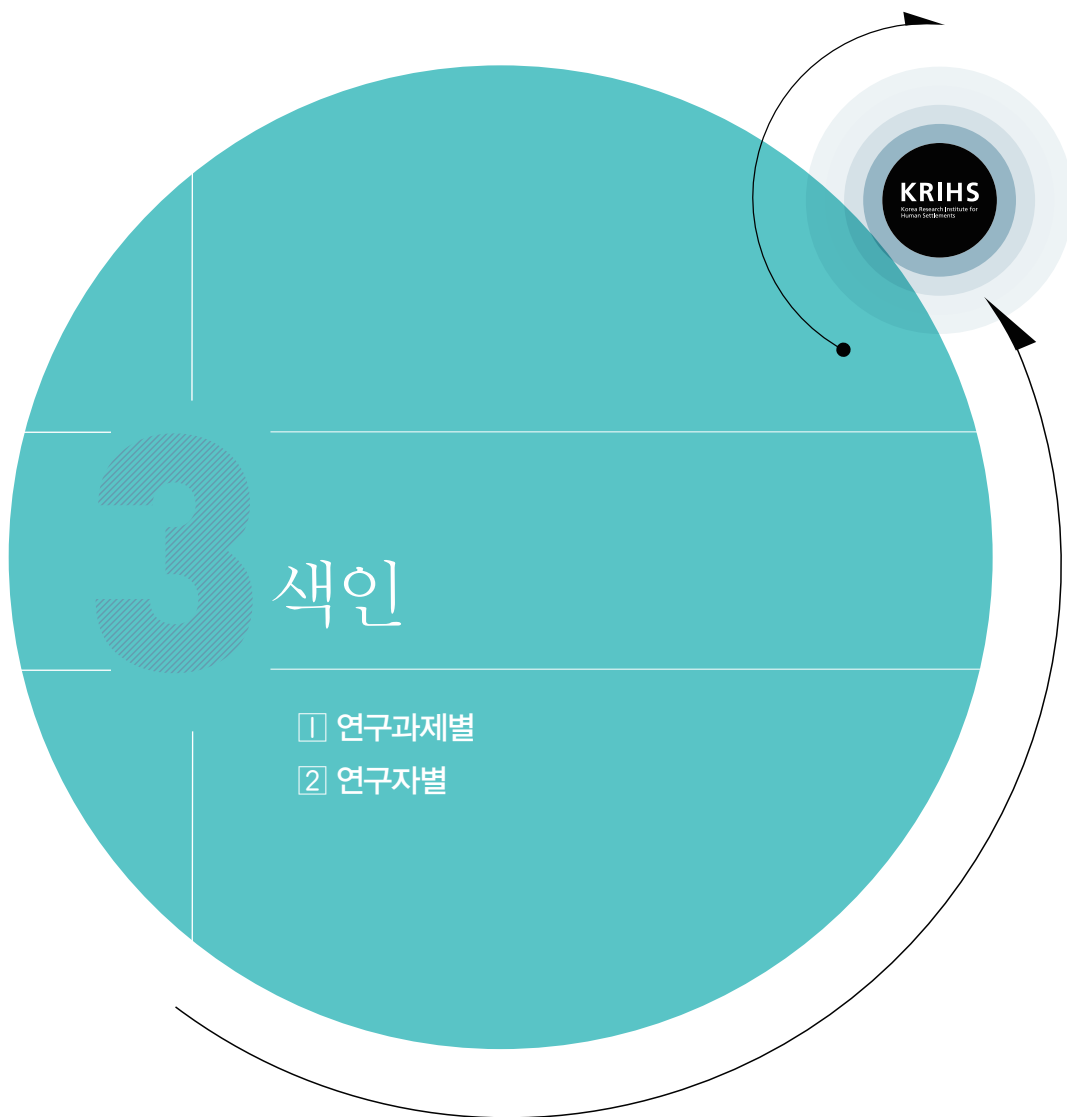
- 수요관점과 공급(지원)체계 관점에서 지역 중심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기반 조성
- 지역특성과 지역수요에 맞춘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구축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활용생태계 조성

- 상시적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지역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실증적 지역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 다양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의 발굴 및 지역정책 담당 실무자들이 실제 업무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문제에 맞는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실증기반 지역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및 지역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생산체계 규정화
-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채널 확대 및 주민 체감형 지표 발굴과 참여형 지표 개발 활성화
-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직 채용



Ⅰ 연구과제별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86	人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39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47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40
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69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50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59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64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70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 방향 연구	30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41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31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중심으로—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32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81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33		스마트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클라우드화 전략 연구	92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65		○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51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42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90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71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35		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	72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52		(공공건설사업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중심으로)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34		ㅈ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36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82
글로벌 공간정보역량 비교분석 및 해외진출전략 연구	91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73
ㄴ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93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78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자원제도에 관한 연구	43
대도시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79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44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방안	80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83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53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Ⅲ)	74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54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	94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55		ㅋ	
도시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56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84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ㅌ	
ㄷ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85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37		ㅍ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38		포용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60
ㅂ			ㅎ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57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시장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66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7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Ⅱ)	68			
비시가지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58			

2 연구자별

ㄱ

강민조	36, 92
강혜경	91
강호제	32
고용석	81, 82
구민상	79
구형수	58, 59
권영섭	38
김광익	30
김광호	78, 86
김규식	74
김근용	65, 66, 74
김대중	90
김대진	74
김동근	44, 79
김동한	35, 47
김명수	59
김미정	92
김민철	64, 66, 71
김상록	82, 83
김상조	51
김선희	38, 52
김성일	64
김소영	61
김수진	59, 60, 61
김은란	51
김중학	81, 84
김준기	81, 84
김진범	31
김창현	32
김천규	45
김태영	56
김태환	61, 68, 73, 74
김현아	35
김혜란	82
김혜승	65
김호정	83
김흥석	84

ㄴ

남기찬	37
문지희	68
민범식	57
민성희	32, 37

ㄷ

박경현	31, 34, 40
박미선	51
박세훈	54, 55, 61
박소영	53, 57, 61
박정은	54, 56
박정일	30, 33
박종일	81
박종택	92
박준	67
박찬	52, 61
박찬규	65, 70, 74
박태선	34
박현준	79
방보람	74
배유진	56
배윤경	80, 82
변세일	66, 68, 73, 74
변필성	44

ㄹ

서연미	30
서태성	35
송지은	54, 59, 61
송하승	59, 67
신철영	40

ㅇ

안홍기	37, 82
오성호	86
왕광익	52
유재윤	56
육동형	83, 85
육은정	57
윤서연	83, 90
윤하중	64
이동우	34
이미영	35, 41
이민정	55, 57
이백진	45, 46, 86
이병재	61, 81
이상은	50, 52
이상준	45, 46
이수옥	68, 73
이순자	34
이승복	64, 72
이승훈	72
이영주	94
이왕건	54, 57
이윤상	65, 69, 70
이윤석	31
이윤주	55, 57
이재용	91
이준호	68
이춘용	79, 83
이태리	66, 74
이현주	43, 45, 46
이형찬	73
이효란	44
임상연	55
임영태	79
임용호	36, 90
임은선	93, 94
임지영	35, 55, 61

ㅈ

장은교	34, 40
장철순	31
전성제	68, 93
정소양	56
정우성	38, 39, 55, 61
정일호	82
정진규	86
정희남	66
제갈영	74
조남건	82
조정희	64

ㅊ

차미숙	51, 94
차은혜	44, 52
천현숙	70
최수	67
최진	68
최진도	68
최희욱	68

ㅋ

하수정	38
한우석	35, 91
홍사흠	30, 32, 42
황관석	73, 74
황명화	74, 92, 93

CHAPTER

04

연구지원활동

1. 주요 행사
2. 글로벌 협력
3. 발간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5
Annual Report

1. 주요 행사

2015.3.20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2015 북한 경제·국토분야 연구성과 발표회의

4.8



2015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4.10



국토연구원-국토지리정보원-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MOU

4.30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체계의 발전 방향 세미나

5.22



국토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MOU

6.9



제1회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세미나

7.1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식

7.23



제주 미래비전 수립 전문가 토론회

8.12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전문가 토론회

8.29



제16회 전국 지리올림피아드 대회 시상식

9.1-11



2015년도 지자체 공간정보 담당자 워크숍

10.7



시·도연구원 도시정책 세미나

10.13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15



도로연구기관 합동세미나: 경제를 살리는 길

10.23



국토포럼 공개토론회

10.29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자체 설명회

11.14

제2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

11.19



2035 새만금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11.20



2015 국토연구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
심포지엄

12.8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정책연구협의회

12.10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16



건설 · 인프라분야 KSP 사업 효율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

12.18



2015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12.30



제14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2. 글로벌 협력

1 해외학술교류

1.13



국토연구원-미컬럼비아대 도시재생 합동세미나

2.10

말레이시아 말라야대 스마트도시 기술시찰단
내원기념 워크숍

2.11

국토연구원-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제4차 공동세미나

3.20

제1차 국토연구원-도쿄대학교
도시기반안전공학국제연구센터 공동워크숍

4.14

베트남 도시개발관리법 제정 및 관련법
정책제언을 위한 워크숍

6.3



세계은행, 라오스, 멕시코, 인도대표단 내원 워크숍

7.1



국토연구원-볼리비아 개발기획부 국토개발계획 워크숍

7.23



국토연구원-카리브해 5개국, 국토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전략 워크숍

7.24



국토연구원-아시아 및 CIS지역 국가, 국토개발전략 워크숍

10.22



라오스 NSDI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토론회

11.18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와의 국토개발계획 역량강화 세미나

11.24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 비전에 대한 국제세미나

11.30



제4차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연례워크숍

12.1



한일 마이크로지오데이터 국제심포지엄

12.1



제3차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연례워크숍

12.14-15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국제컨퍼런스

2 연수프로그램

3.22-28



KSP 정책자문 III 초청연수

4.7-28



중남미 3개국 대상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과정 연수

7.27-31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10.22-11.7



2015 KRIHS-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초청연수

11.30-12.4, 12.14-18



세계은행과 공동 초청연수

12.6-12



2015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3 글로벌개발협력 센터 활동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발도상국 등 저소득 국가의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국토·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37년간 축적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대학과 학술 및 정책연구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성숙한 국제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문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 및 개발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주택건설, 인프라개발 등 국토개발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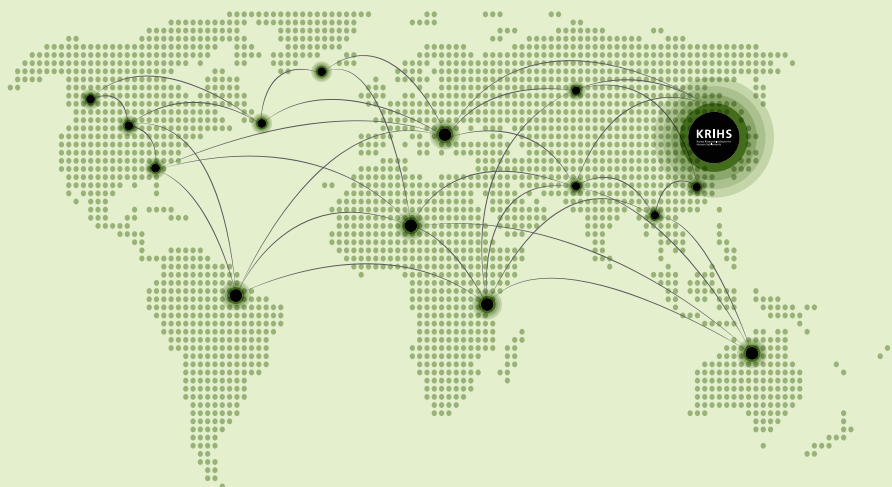
정일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Leeds 교통계획학 박사, 교통기술사 | SOC투자정책,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 분석

박미선 | 책임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송하승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 도시계획, 토지개발

유희연 | 연구원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석사 | 국제개발 협력, 인문지리, 도시지리

이소영 | 연구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 | 국제개발 협력, 주택정책



2015년 사업실적

국제기구/해외 연구기관과 신규 MOU 체결 및 기존 MOU 강화 및 내실화

-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콜롬비아 국토개발금융공사(Finder), 남가주대학교(USC), UN Cartographic Section과 신규 MOU 체결, 공동연구 및 공동워크숍 등 수행
-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우드로윌슨센터 등 기존 MOU 체결기관과 공동연구, 교육연수, 정례 워크숍 등으로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MOU 실천

해외기관과 활발한 연구인력 교류를 통해 다양한 공동연구 및 해외 수탁연구 수행

- 아시아개발은행(ADB), 남가주대학교(USC),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소 등 국제기구 및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 수행 다수

| 주요 연구성과 |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국제/외국기관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5.6.30~2016.6.30	일본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 연구센터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2015.10.21~2016.4.17	우드로 윌슨센터 (WWC)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현황 및 편익 사례 연구	2014.12.25~2015.9.30	미주개발은행 (IDB)

- 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각 분야별 국외 전문가(교수 등) 초청, 공동연구 수행
- 2015~16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3건, 2014~15년 사업 5건 수행하여 우리나라 건설 인프라 분야 지식 및 경험을 대상국 정부와 공유하고 정책적·기술적 자문 및 정책권고안 제언

연구성과의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32건의 국제세미나 개최, 41건의 국제세미나 참여

- 'The Future of National Urban Policy (UN-Habitat,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최), 세계은행(WB)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정례워크숍 등 국제세미나 32건 개최
- IDB-IIC 연차총회 지식공유포럼, World Urban Campaign (WUC) 운영위원회 및 HABITAT III 준비회의 등 41건의 국제세미나 참여

3. 발간물

1 국토

통권 399호 | 2015. 1

국토시론

통일은 한반도 경제의 성장동력 이상만

특집 | 통일시대의 국토정책방향

1. 통일 한반도 비전과 국토전략 김원배
2. 통일시대의 국토관리 정책 최막중
3. 통일시대의 한반도 교통·물류체계 구축방향 이백진
4. 통일 국토환경 발전전략 정화성
5. 통일국토개발 재원조달 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이유헌

용어풀이 19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이현주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22 • 정중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준비된 통일이 행복한 통일이라는 국민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준

우리 옛길 걷기 17

질푸른 바다와 올망졸망한 산들이 펼쳐놓은 풍경 한 자락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9

예천 비룡산의 장안사(長安寺)와 원산성(圓山城) 박영순

e-interview • 자넷 스미스(Janet Smith)

젠트리피케이션과 근린 변화 김영준

영화와 도시 13 • 영화 '와즈다(Wadja)'

리야드의 이슬람 소녀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 안명의

마을의 재발견 5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경험과 생각

이해경

해외리포트

아일랜드 발리문(Ballymun)의 도시재생사업 특성과 시사점 이준호 · 전성제

글로벌정보

내일의 도시를 생각하는 건축 및 도시계획 공모전 실시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제23차 한·일 간선경제 워크숍 박대근

서민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대진

제2회 시·도 연구원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정미숙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정년퇴임식 및 종무식' 개최 외

KRIHS 보고서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유재운 외 지음) 양재섭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이상준 외 지음) 김현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통일 비전과 통일 준비 손기웅

통권 400호 | 2015. 2

국토시론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회복력 제고 박삼욱

특집 |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국토

1. 회복력의 구성요소와 실행방향 서지영
2.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과 정책방향 변창욱
3. 도시 방재력(Urban Resilience) 개념을 적용한 도시방재계획 김현주 · 신진동
4.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및 인프라 자산관리 도명식
5. 지역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의 개념과 적용방안 전대욱
6. 위기에 대응하는 해외의 회복력 제고사례 하수정
7.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을 위한 혁신: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 실험과 성과 이재준

용어풀이 198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nomic Resilience) 홍사흠

이슈와 사람 123 •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저성장 단계의 우리 사회, 회복력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수정

우리 옛길 걷기 18 걷다보니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었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0

예천권씨 종택과 대동문부군옥(大東門府群玉) 박영순

e-interview • 섀넌 밴젠트(Shannon Van Zandt)

미국의 저소득층 자가소유와 회복력 최명식

영화와 도시 14 •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 김정곤

마을의 재발견 6

마을공론장 형성에서 나타난 난제들과 시사점: 서울 광진구 사례 김민수

국토 옴부즈만 93

해외리포트

지속가능한 도시경제재생: 미국 메노미니 벨리의 경험과 시사점 박정일 · 최태림

글로벌정보 • 런던의 도시 회복력(Resilience)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방안 세미나 권혁일

국토연구원 단신 •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해외전문가 기관장 연담 개최 외

KRIHS 보고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이준용 지음) 김경석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한우석 지음) 전개원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회복력 있는 공동체, 신뢰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김영태

통권 401호 | 2015. 3

국토시론

국토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화두, 사람과 안전

김문겸

특집 |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1. 국토 라이프라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장철순
2. 국토 라이프라인의 생애주기 정보관리 방향 정인수 · 이현동
3.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한 ICT 융 · 복합 이재용 · 정진도
4.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 및 중점분야
이현동 · 황인주 · 공명식
5. 국토 라이프라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거버넌스 구축방안 김현수
6. 국토 라이프라인 법 · 제도 · 정책 개선방안 최환용
7. 해외의 국토 라이프라인 계획 및 투자사례 김진화 · 고민구 · 정승건

용어풀이 199 라이프라인(Lifeline) 외

김형철

이슈와 사람 124 · 이승호 한국지반공학학회

"재해방재로 안전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철순

우리 옛길 걷기 19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겨지는 젊은 날의 초상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1

안동(安東) 하회마을과 병산서원(屏山書院)

박영순

e-interview · 사이 애들러(Sy Adler)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조성운 · 성세영

영화와 도시 15 · 영화 '괴물'과 '클라우드 아틀라스'

정소로서의 서울, 공간으로서의 서울

홍석경

마을의 재발견 7

도시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공유플랫폼 사례

주광진

국토 옴부즈만

해외리포트 미국의 도시계획지원 앱 구축 및 활용

김근태

글로벌정보 샌프란시스코시의 라이프라인 재해복구 연계 시스템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제4차 공동세미나

송지은

국토연구원 단신 '제39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 개최 외

자료화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박미선 외 지음)

박현주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임은선 외 지음)

김정훈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의 생명줄, 라이프라인

이희정

통권 402호 | 2015. 4

국토시론

글로벌 시대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조형제

특집 | 산업도시의 미래

1.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성장전략 서동혁
2. 산업도시의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장철순
3. 산업도시 울산의 현재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이은규
4. 산업도시 거제의 명품화와 지속가능 발전방향 송부용 · 박진호
5. 미국 산업도시의 경험과 교훈 이윤석
6.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박영철

용어풀이 200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이윤석

이슈와 사람 125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산업도시들은 창조적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진화해나가야 합니다"

장철순

우리 옛길 걷기 20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2

도산서원(陶山書院)과 퇴계종택(退溪宗宅)

박영순

e-interview · 빌리 윌리엄스(Billy Williams)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송태진 · 표기현

영화와 도시 16 · 영화 'The Rock' 두 얼굴의 샌프란시스코

이성태

마을의 재발견 8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위한 경기도의 구상

류인권

해외리포트 혁신 스타트업의 천국, 영국 테크시티의 경험과 교훈

이윤석

글로벌정보

쇠퇴 산업도시의 새로운 가능성-클라블랜드 모델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제1차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도쿄대학교

도시기반안전공학국제연구센터 공동워크숍

이병재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2015 북한 경제 · 국토분야 연구성과

발표회의

배은지

국토연구원 단신 '최병암 산림청 국장 초청 전문가 특강' 개최 외

국토 옴부즈만

KRIHS 보고서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장철순 외 지음)

홍진기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김동근 외 지음)

홍성조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주강현

통권 403호 | 2015. 5

국토시론

時空自在의 세상을 여는 사물인터넷

김영표

특집 | 사물인터넷으로 만드는 초연결 창조국토

1.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추진방향

주대영

2. 사물인터넷 시대의 스마트도시 정책방향

박승기 · 이동창

3. 농촌의 삶을 바꾸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

안정훈 · 이혜림

4. 사물인터넷으로 안전해지는 도로교통 서비스

조순기

5. 사물인터넷과 공간정보를 융합한 만물인터넷: Geo-IoT

이용준

6. 사물인터넷으로 진화하는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이재용

용어풀이 201 사물인터넷(IoT)과 만물인터넷(IoE)

정진도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26 · 이윤덕 IoT실증사업추진단장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연결(Connectivity)과 지능(Intelligence)의 결합입니다”

이영주

우리 옛길 걷기 21

열 걸음 걸어가다 아홉 번 뒤돌아보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3 고건축 사찰, 안동 봉정사(鳳停寺)

박영순

e-interview · 크리스 햄넷(Chris Hamnett)

런던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층, 그리고 교육

이선영

영화와 도시 17 · 영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등

청춘들이여, 타이베이로 꿈꿔라

한지은

마을의 재발견 9 부산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전략과 구상

권진희

해외리포트 코펜하겐의 친환경 도시정책 현황과 시사점

송지은

글로벌정보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실험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2015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이윤석 · 차은혜 · 김다윗

제7차 대구 · 경북 세계물포럼 국제세미나

한우석 · 유진욱

국토연구원 단신 ‘공유도시포럼 전문가 특강’ 개최 외

KRIHS 보고서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김성일 외 지음)

김명수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김준기 외 지음)

이수범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사물인터넷 시대, 도시정책을 말한다

조병완

통권 404호 | 2015. 6

국토시론

주택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조주현

특집 | 주택금융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박찬규 · 이태리

2.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방안

송인호

3. 주택금융시장의 소비자 안심방안

유승동

4. 서민주택금융시스템 개선방안

방승희

5. 주택도시기금의 도입과 운용방안

이호철

6.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리츠를 중심으로

이현석

7. 가계 자산구조의 변화와 주택자산 유동화 과제

이휘정

용어풀이 202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외

최진

이슈와 사람 127 ·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찬규

우리 옛길 걷기 22 영일만 친구도 반겨주는 천혜의 바닷길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4

빙계사지 오층석탑과 빙계계곡 군립공원

박영순

e-interview · 테오 아렌체(Theo Arentze)

통행행태 및 교통모형에서의 제한된 합리성

김진희

영화와 도시 18 ·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기억이 머무는 곳, 파렌체

박준호

마을의 재발견 10 도시 속 행복한 마을살이: 대구 안심마을 사례

이형배

해외리포트 지역 정체성을 활용한 이탈리아 농촌관광

박초롱

글로벌정보

주택입류 방식을 위한 융자조정 및 재융자제도 실시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단신 ‘제41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 개최 외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 방안 연구(박찬규

외 지음)

진창하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김태환 외 지음)

김건엽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주택금융, 사람을 품다

김덕례

통권 405호 | 2015. 7

국토시론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교통시스템 구축

김영찬

특집 | 국가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1. 교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향

엄진기

2. 교통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위치정보 보호

윤서연

3.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도 제고방안

김순관

4. 고속도로 교통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

남궁성

5.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책지원시스템: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은미

용어풀이 203 개방형 API 외

김광호

이슈와 사람 128 • 김진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장

“공공데이터 활용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합니다”

윤서연

우리 옛길 걷기 23 흐르는 강물에 수심을 떠나보내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5

조문국사적(召文國史蹟)과 금성산고분군

박영순

e-interview • 강민제(康民杰) • 황수메이(黃舒媚)

타이완의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바오창옌 예술촌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은

영화와 도시 19 • ‘하우스 오브 카드’

워싱턴 D.C.: 도시에 숨겨진 권력의 뒷모습

남경철

마을의 재발견 11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남문화재단 사례

유상진

해외리포트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역교통 분석: 워싱턴D.C.-버지니아주를 중심으로 이재선

글로벌정보 교통분야 빅데이터 구축에 따른 민간부문 역할 증대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단신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식' 개최 외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김동한 외 지음)

정재준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와

대응전략(이용우 외 지음)

서순탁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빅데이터와 데이터 유통

김기병

통권 406호 | 2015. 8

국토시론

재해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한다

강양석

특집 | 초대형 재해에 대비한 국토안전망 구축

1. 초대형 재난 위험사회의 대비

박지영

2. 초대형 재해 리스크 전망과 분석

반영운

3.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김규현

4. 초대형 재해로 인한 2차피해 관리방향

강상준

5. 국가기반시설 상호 연계성과 초대형 재난의 위험성

신진동

6. 도시의 재해 취약성 분석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이병재

7. 초대형 재난에 대비한 시민안전 제고방안

윤동근

용어풀이 204 방재지구(Disaster Prevention District) 외

문준수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29 •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병재

우리 옛길 걷기 24 천년 숲에서 나의 길을 찾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6 서석지와 연당리석불좌상

박영순

e-interview • 스티브 폴진(Steven E. Polzin)

미국의 출퇴근 통행 행태와 추세

이찬영

영화와 도시 20 • 영화 ‘블랙 레인’과 ‘프린세스 도요토미’

오사카, 도쿄에 반기를 들다

강태웅

해외리포트

해외 도시 패스의 매력과 시사점

조남건

글로벌정보 초대형 재해에 대비한 국가비상사태 운영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제주 미래비전 수립 전문가 토론회

하보름

국토연구원 단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외

KRIHS 보고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하수정 외 지음)

전대욱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김동한 외 지음)

윤정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송창근

통권 407호 | 2015. 9

국토시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의 활용 조영희

특집 | 국토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

1. 위성영상정보 활용 국가정책방향 사공호상
2. 재난안전 분야의 위성영상정보 활용과 효과 박영진
3. 농업생산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영상정보 활용 기술 개발 홍석영
4. 수자원 및 하천 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정보 활용 서애숙 · 김지인
5. 해외 고해상도 국토관측 위성영상정보 활용현황 및 도전 과제 임정호
6. 국토관측 위성영상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 과제: 활용 전담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강민조

용어풀이 205 차세대중형위성 외 강민조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30 · 김광은 대한원격탐사학회장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촉진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민조

우리 옛길 걷기 25 새로운 세상의 열망이 머물던 역사의 길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주실마을과 호은종택 박영순

e-interview · 존 번(John Byrne)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주희

영화와 도시 21 ·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가적을 꿈꾸는 도시, 버펄로(Buffalo) 최성근

나눠쓰고 함께쓰고 1 '공유', 도시의 새로운 해법이 될까? 김은란

해외리포트

일본의 리노베이션 마을만들기 정책과 유희 부동산 활용 이승민

글로벌정보

원격탐사위성 Landsat의 활용을 통한 국익창출 효과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전문가 토론회 이종화

국토연구원 단신 '이슬람 및 아랍문화 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Ⅱ)

(김대중 외 지음) 류중석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유재윤 외 지음) 이석환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해양영토, 인공위성이 지킨다 유주형

통권 408호 | 2015. 10

국토시론

한강을 다시 생각한다 최승담

특집 | 한강협력계획의 의의와 미래 정책방향

1. 한강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이인성
2. 문화유산 한강의 역사성 회복 전우용
3. 한강 자연성 상실과 회복방안 한봉호
4. '한강협력계획(2015)'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태환
5. 한강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과제 최자은
6. 한강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 박현찬 · 한유주

용어풀이 206 하천지구지정 김유란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31 · 이재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대한민국의 상징인 한강의 잠재력을 개발하겠습니다" 김명수

우리 옛길 걷기 26 아홉 가지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들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8 대소산불수대와 신돌석 장군 유적 박영순

e-interview · 샘 브로디(Samuel D. Brody)

리질리언스 사회를 위한 홍수위험 감소방안 이윤정

영화와 도시 22 · 영화 '아름다운 5월'과 '메트로 마닐라'

마닐라,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공간 김수진

나눠쓰고 함께쓰고 2

'내 집'보다 '우리 집', 민달팽이들의 보금자리 찾기

- 민달팽이유니온의 주거공유 사례 임소라

해외리포트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차미숙

글로벌정보 센 강변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 여가공간 조성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2015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CGIS) 강민조

국토연구원 단신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과학도시대학원 부원장 초청 ECOLE 전문가 특강' 개최 외

KRIHS 보고서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이상준 외 지음) 김현수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민성희 외 지음) 문채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우리 역사의 말없는 증언자, 한강 엄복규

통권 409호 | 2015. 11

국토시론

사회적 경제의 지역 기여를 위한 생태계 조성

조영복

특집 |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1. 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

장원봉

2.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정책현황과 과제

채종현

3. 도시재생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운영실태와 과제

박세훈

4.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이은애

5.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확장을 위한 전략

김종수

6. 해외의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사례: 일본과 홍콩의 경험

정소양 · 임상연

용어풀이 207 사회적 협동조합

김영민

국토 옴부즈만

이슈와 사람 132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세훈

우리 옛길 걷기 27 그리움이 깃든 아라리 가락에 걸음을 멈추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89 울진 봉평리 신라비

박영순

e-interview · 로버트 세베로(Robert Cervero)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Green TOD

김자영

영화와 도시 23 · 영화 '롬 레이다'

세계문화유산 도시 씨름의 새로운 전성기와 과제

강미희

도시문제 '공유'로 풀다 3

함께해서 즐거운 집, 청년들의 셰어하우스 만들기

- 셰어하우스 우주(WOOZOO)

박준영

해외리포트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재생: 아마존의 시애틀에 입지사례

손동욱

글로벌정보 유럽 내 사회적 경제의 점진적 발전 외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개원 37주년 기념세미나

송지은 · 김소영

국토포럼 공개토론회

정우성

국토연구원 단신

'2015 KRIHS-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 정책 역량강화 초청연수' 실시 외

제2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및 입상자 명단

KRIHS 보고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변필성 외 지음)

김정연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황영화 지음)

이경주

시간안내 토지정책론(정희남 외 지음)

백성준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란

홍광은

통권 410호 | 2015. 12

국토시론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조만

특집 |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1.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권혁진

2. 인구구조 변화와 장래 주택 수요 및 공급 전망

이창무

3. 재고주택 시장과 재고주택 관리 정책방향

허윤경

4. 서민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

김덕례

5.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태리 · 황관석

6. 주택매매거래 증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변세일 · 황관석 · 박찬규

용어풀이 208 서민주택금융 외

방보람

이슈와 사람 133 · 이정식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천현숙

우리 옛길 걷기 28 바람이 들려주는 옛사람의 흔적들

신정일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90 천축산 불영사와 3층석탑

박영순

e-interview · 니콜라스 펠프스(Nicholas Phelps)

집적경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교외화

전봉경

영화와 도시 24 · 영화 '자본주의: 러브스토리'

산업이 빠져나간 도시의 민낯, 디트로이트와 플린트

박내선

도시문제 '공유'로 풀다 4

사회혁신가를 위한 베이스캠프, 스페이스 노아

유하연

해외리포트 시카고의 도시계획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

김근태

글로벌정보 주택건설 장려를 위한 '코린 재정지원' 정책 외

국토 옴부즈만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 비전에 대한 국제세미나

배은지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토연구원 협력 심포지엄

김소영

국토연구원 단신

'제20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 개최 외

KRIHS 보고서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II)

(전성제 외 지음)

박환용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차미숙 외 지음)

김현호

2015년 국토 총목차(통권 399~410호)

자료회원 가입안내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단독주택, 다시 '집'의 위치로 돌아오다

김창균

2 국토연구

통권 84권 | 2015. 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사업방식 비교를 통한 정비방안 연구_한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의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장영호 · 임영진

지가변동의 시대별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수복

대중교통 승하차 수요분석을 통한 서울시 역세권 유형화 및 토지이용 특성 연구 이정우 · 고주연 · 전상우 · 전철민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_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문시진 · 이근재 · 최병호

도시 커뮤니티 형성 과정의 탐색_서울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지 · 최현선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논리 구성의 특징 비교 분석 박정해

중 · 장 · 노년층 자가소유 가구의 자산효과 차이 분석 이현정 · 유중선

비시기화지역 개발행위허가 실태분석 연구_화성시를 중심으로 김상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리체계 실태 및 정책적 개선 대안 채병선 · 문준경 · 이만형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에 기초한 도시권 확정과 공간구조 분석 이세원 · 이희연

통권 85권 | 2015. 6

총량 복원을 적용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송하승 · 이길용 · 전은선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한 옥녀봉의 형국 유형별 풍수적 특성 연구 서춘석 · 천인호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김진유

Pricing the Options in Housing Contracts and Risk Management 김창기 · 신동훈 · 김명현 · 정승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택지개발 제도변화 분석: 공영택지개발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유기현 · 서순탁

역내 및 역외 간 인구이동과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 이재민 · 김희호

일제강점기 원산의 극장 원산관(元山館) 연구: 지역의 문화적 거점 공간 생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김남석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박준 · 김재환

세대별 자가선택요인 분석을 통한 자가점유 제고방안 우윤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피스 임대시장 구조변화 분석 류강민 · 이병현 · 이창무

통권 86권 | 2015. 9

지역 경제변수와 지역 고용성장 간 관계 최지혜 · 김일태

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 김동한 · 김현중 · 구형수 · 김은빈

행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 운영관리 방안 연구 :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반, 상부시설, 주민편의시설의 운영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김옥연 · 김주진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도시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경험 이권희 · 박종화

양방향 버스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설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권진경 · 김경석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 :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주진 · 류동주

주택연금의 장수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생명표 비교분석 연구 김선주

취약계층의 통행 특성 및 행동 분석을 통한 사회적 배제 분석 윤영원 · 장수은

공동체 참여형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 내 반영실태에 관한 고찰 : 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태희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서울과 도쿄 대도시권의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제도 분석 : 도시계획제도의 국가 간 제도 이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박민규 · 강명구 · 정상훈

통권 87권 | 2015. 12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김성연 · 권성문 · 서원석 · 양광식

주택담보대출에서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발생시기별 위험률 : DT와 LTV 비율의 교차효과를 중심으로 김문태 · 이용만

다층모형을 활용한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결정요인 분석 박경준 · 이성우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패턴 및 영향요인 분석 연구 김지윤 · 임수연 · 추상호 · 박인기

오피스 임대시장의 보증금 크기에 따른 전환을 차이 분석 민성훈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선택가치 추정 김민재 · 이영성

Location of Big Box Retailers and Its Accessibility for Minority and Low-income Communities: The Case of Austin, Texas, USA 박정일

인종별 다문화가족 밀집거주지의 공간분포 특성 민성희 · 안용진 · 박정호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장기변동 분석 김영단 · 서순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여성준 · 강기철

계획자원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 수도권 지역의 건물에너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김동한

3 국토정책 Brief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제496호	2015. 01. 05	국민체감형 국토·도시정책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김동한, 김은빈
제497호	2015. 01. 13	전월세시장 행태 및 인식 변화와 시사점	박천규, 박미선
제498호	2015. 01. 19	대도시 공업용지 변화와 관리정책 방향	서연미, 김용환
제499호	2015. 01. 27	모바일 빅데이터의 국토교통 분야 활용 및 시사점	김종학, 고용석, 김준기
제500호	2015. 02. 03	국민 입장에서 국토 바라보기: 국토체감지표의 개발과 활용	임은선, 이영주, 차미숙, 김종학
제501호	2015. 02. 10	생활밀착형 수자원 정책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김창현, 김종원, 한우석
제502호	2015. 02. 16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강미나, 안흥기, 유미경
제503호	2015. 02. 23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
제504호	2015. 03. 02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의 진단과 활용	하수정, 남기찬, 민성희, 전성제
제505호	2015. 03. 09	저성장기의 도시기본계획제도 방향	김성수, 구형수
제506호	2015. 03. 16	산업도시의 진단 및 경쟁력 강화방안	장철순, 이윤석
제507호	2015. 03. 2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안내서 활용	김태환, 전혜선, 김은정
제508호	2015. 03. 30	창조산업·창조계층 입지특성과 도시경쟁력	김은란, 박경현, 정소양
제509호	2015. 04. 06	재개발·재건축 사업 파급효과, 사전에 알 수 있다	전성제, 변세일, 박천규
제510호	2015. 04. 13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	박천규, 이태리
제511호	2015. 04. 20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효과	이태리
제512호	2015. 04. 28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	안흥기, 박경현, 서태성
제513호	2015. 05. 0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방안	차미숙, 이원선, 임은선
제514호	2015. 05. 11	지역행복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이순자
제515호	2015. 05. 18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개선방향	이춘용
제516호	2015. 05. 26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 방향	안흥기, 김혜란
제517호	2015. 06. 01	도시가로망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사고 저감방안	김준기, 김종학, 최소림
제518호	2015. 06. 08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방재 복원력(Resilience) 구축방향	한우석, 유진욱
제519호	2015. 06. 15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이병재
제520호	2015. 06. 22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윤하중
제521호	2015. 06. 29	국토공간구조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	이용우, 손학기, 김선희, 김동한, 임상연, 윤영모, 임지영, 강은진
제522호	2015. 07. 06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조남건, 김혜란, 정진규, 김홍석
제523호	2015. 07. 13	국가 가뭄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방향	이상은
제524호	2015. 07. 20	스마트한 국토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방안	김대중, 윤서연, 임용호
제525호	2015. 07. 27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차미숙, 이원선, 김선희, 임은선, 이영주, 윤영모, 이지원, 박재희
제526호	2015. 08. 03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주요 도시 발전방향	이상준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제526호	2015. 08. 03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 주요 도시 발전방향	이상준
제527호	2015. 08. 10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김천규, 이상준 임영태, 이백진
제528호	2015. 08. 24	전세자금지원프로그램 현황과 소득계층별 효과	이태리
제529호	2015. 08. 31	스마트도시 해외동향 및 시사점	이재용, 사공호상
제530호	2015. 09. 07	데이터기술(DT)시대, 기본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김미정, 사공호상
제531호	2015. 09. 14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은, 김종원
제532호	2015. 09. 21	도로 자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김혜란
제533호	2015. 09. 28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과 시사점	박종택, 사공호상
제534호	2015. 10. 05	도로부문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고용석
제535호	2015. 10. 12	'정책지도' 활용현황 및 발전과제	황명화, 임은선, 전성제
제536호	2015. 10. 19	대중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수도권 통행분석	이미영
제537호	2015. 10. 26	개별 산지 및 산림 특성에 기초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방안	송하승, 이길용
제538호	2015. 11. 02	통행시간절감편익 산정의 실효성 제고방안	육동형
제539호	2015. 11. 09	한강의 자연성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태환, 김유란
제540호	2015. 11. 16	부동산산업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정희남, 김승중, 송하승
제541호	2015. 11. 23	포스트 개발시대 공영개발의 방향과 시사점	이형찬, 최수
제542호	2015. 11. 30	미국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 및 시사점	김승중
제543호	2015. 12. 07	산업단지와 지방세 수입과의 관계 및 시사점	정우성
제544호	2015. 12. 14	고용접근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과제	박정일
제545호	2015. 12. 21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대중교통서비스 형평성 제고방안	배윤경
제546호	2015. 12. 28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시사점	이현주

4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 8호 | 2015. 1

인포그래픽스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주요 국가의 연간 부동산 자산
그래픽으로 보는 부동산시장 빅데이터 분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K-REMAP지수

심층분석

전월세시장 변화의 양상과 시사점

정책과 시장

고령화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제 9호 | 2015. 4

인포그래픽스

세계 주요 도시별 100만 달러로 매입할 수 있는 오피스 면적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본 정책 모니터링: 뉴스테이(New Stay)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1분기 내내 상승, 주택전세시장 상승 후 3월에 하락

심층분석

심리로 보는 주택시장: 가구의 가격전망 인식, 그 특징은?

정책과 시장

주택시장의 트렌드와 정부정책의 요점

제 10호 | 2015. 7

인포그래픽스

OECD 국가의 주택 인허가 실적 증감률
OECD 국가의 건설 부문 생산 증감률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본 시장 모니터링: 분양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4월 고점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주택전세시장 4월 반등 후 2개월 연속 하락

심층분석

임차수요의 자가전환 거래 규모의 추경과 시사점

정책과 시장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제 11호 | 2015. 10

인포그래픽스

세계 주요 국가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세계 주요 국가별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본 시장 모니터링: 월세, 전세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전 분기에 이어 상승국면을 유지
최근 2개월 동안 소폭 하락

심층분석

가구가 보유한 부채의 성격과 연체 가능성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시대, 실존으로서 거주(Wohnen)와 토지주택은행정책

5 도로정책 Brief

제 87호 | 2015. 01

칼럼

도로의 변화를 위한 2015년 도로정책 제언 유정복

해외정책동향

캘리포니아주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 정책 이재현
 유타주 대중교통 요금체계 전환 사례: 형평성 측면의 학술적 접근 육동형
 햄트로드 MPO 투자우선순위 분석 이재섭

제 88호 | 2015. 02

칼럼

4만불 시대 가치의 도로시스템 구축 노관선

해외정책동향

Automobile이 진정된 Autonomous mobile이 되는 세상 이찬영
 유럽의 새로운 실험 : eHighway System 최윤혁
 게임화 전략을 이용한 통행행태 변화 김민영

제 89호 | 2015. 03

이슈&칼럼

사회적 활인율,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김태승

해외정책동향

가변속도제한 연구동향과 이슈 최세로나
 미국의 도로안전 연구동향 임준범
 영국 간선도로 사업 추진 전략 손유진

제 90호 | 2015. 04

이슈&칼럼

섬세한 도로정책 김영찬

해외정책동향

미국 교통기관의 통합적 기후변화 적응체계 김창모
 유럽의 유동식 카셰어링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김진희
 미국의 ITS 전략계획 2015-2019 박성경

제 91호 | 2015. 05

이슈&칼럼

가변속도제한 도입이 시급하다 한상진

해외정책동향

캘리포니아의 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위한 생애주기 분석 방법론 이진우
 맨하탄-뉴저지간 통근교통 네트워크 강은아
 터키의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체계 김상록

제 92호 | 2015. 06

이슈&칼럼

새로운 이동가치의 고속도로 남궁성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민간 교통 정형 빅데이터 활용 현황 송태진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현황 및 시사점 최성택
 런던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정책 강화와 시사점 박현욱

제 93호 | 2015. 07

이슈&칼럼

교통세의 일몰과 지속가능 도로투자

최기주

해외정책동향

독일의 고령 운전자 관련 연구동향과 운전면허 관리 방향

노창균

사람·자동차·트램이 함께 어우러진 이스탄불 도로교통

천승훈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정책과 교통부문의 기회

임현섭

제 94호 | 2015. 08

이슈&칼럼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정책의 방향

최병호

해외정책동향

조지아주 HOT 차로 운영 3년간의 통행료 및 이용자 행태 변화

서원호

도로 위의 급행 대중교통, 이스탄불 메트로버스 시스템

홍성표

도로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미국의 주행세 도입과 이슈

연복모

제 95호 | 2015. 09

이슈&칼럼

교통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언

이기영

해외정책동향

해외도시의 BRT 도입운영 현황과 시사점

고준호

자율주행 기반기술 효과분석 연구동향 및 시사점

정은비

선진국 사회기반시설 평가체계 고찰

박보라

제 96호 | 2015. 10

이슈&칼럼

도시시설 노후화와 도로관리 정책 전환

조혜진

해외정책동향

도로교통 소음관리 해외 정책사례

김광호

미국 연방정부 도로신탁기금의 위기와 대응 노력

오창석

베를린과 런던 사례로 본 도시교통의 새로운 흐름

김민영

제 97호 | 2015. 11

이슈&칼럼

교통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개선

이광호

해외정책동향

교통콘 설치·회수 자동화 기술 해외사례

김진국

뉴욕시의 자전거 도로

강은아

지속가능성을 위한 싱가포르의 육상교통 전략

양윤정

제 98호 | 2015. 12

이슈&칼럼

성과평가를 활용한 도로정책 목표 실현 방안

김호정

해외정책동향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도로의 준비

이기영

스페인의 고속도로 신재생 전력 생산 프로젝트

송재인

유럽연합의 e-Call 법제화 추진과정

손유진

6 건설경제

통권 79권 | 2015. 봄

건설경기 진단

- | | |
|-------------------------|---------------|
| 1.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윤하중, 김민철, 이승훈 |
|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진단 | 박천규, 문지희, 황관석 |
| 3. 최근의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 정창구 |

논단

- | | |
|---------------------------------|-----|
| 1.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지원 방안 | 김명수 |
| 2. 미래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박환표 |

칼럼

- | | |
|-------------------------|-----|
|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제도 현안과제와 대책 | 김재영 |
|-------------------------|-----|

해외건설정보

- | | |
|--------------------------|----------|
| 세계 주요국의 저탄소 도시 정책동향과 시사점 | 김광석, 이현지 |
|--------------------------|----------|

주요 건설통계

통권 80권 | 2015. 여름

건설경기 진단

- | | |
|-------------------------|---------------|
| 1.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윤하중, 김민철, 이승훈 |
|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소비심리 진단 | 박천규, 황관석, 방보람 |
| 3. 최근의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 정창구 |

논단

- | | |
|---------------------------------|----------|
| 1.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방안 | 홍성호 |
| 2. HVMA 고강도 레미콘 실용화 기술개발 | 류득현, 박조범 |

칼럼

- | | |
|-------------------------------------|-----|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건설 산업 기술개발 활성화 가능성 검토 | 김재영 |
|-------------------------------------|-----|

지상중계

- | | |
|-------------------------|-----|
| 건설인과의 KPIHS 연찬회(2015-1) | 조정희 |
|-------------------------|-----|

외국의 건설정보

- | | |
|-------------------------------|----------|
| 해외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공급사례와 시사점 | 고진수, 양재영 |
|-------------------------------|----------|

주요 건설통계

통권 81권 | 2015. 가을

건설경기 진단

- | | |
|--------------------------|---------------|
| 1. 최근의 건설경기 및 투자동향과 전망 | 김성일, 김민철, 이승훈 |
|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 박천규, 황관석, 방보람 |
| 3.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 정창구 |

논단

- | | |
|----------------------------------|-----|
| 1.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사례 실태 및 개선방안 | 이재식 |
| 2.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 배인호 |
| 3. 건설기계의 현안 및 개선방안 | 황홍석 |

외국의 건설정보

- | | |
|---|-----|
|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2015-2019)의 시사점 | 조은경 |
|---|-----|

주요 건설통계

통권 82권 | 2015. 겨울

건설경기 진단

- | | |
|--------------------------|---------------|
| 1. 최근의 건설경기 및 투자 동향과 전망 | 김성일, 김민철, 이승훈 |
| 2.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소비심리 진단 | 박천규, 황관석, 방보람 |
| 3.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진단 | 정창구 |

특집 건설산업의 여건 변화와 건설업계의 대응전략

- | | |
|-------------------------|-----|
| 1. 종합건설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대응전략 | 한창환 |
| 2. 전문건설시장의 여건변화와 대응전략 | 이원규 |
| 3. 설비건설업계의 정책변화와 대응전략 | 강신구 |

칼럼

- | | |
|----------------------|-----|
| 뒤편 걸린 건설산업 돌파구를 찾아보자 | 김재영 |
|----------------------|-----|

지상중계

- | | |
|------------------|-----|
| 제2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 박대근 |
|------------------|-----|

외국의 건설정보

- | | |
|---------------------|-----|
| AIB 출범과 E&C 기업의 시사점 | 김훈상 |
|---------------------|-----|

주요 건설통계

7 Space & Environment

Vol. 61 | 2015년 4월

ISSUES & TRENDS

Building a Smart and Safe City : Focus on Reducing Crime 이재용

Mitigating Disaster through Urban Planning 한우석

National Risk Management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최종익

IN-DEPTH LOOK

The Crisis of Aging SOC Compels Safety Countermeasures 조혜진

GLOBAL PARTNERSHIP NEWS

Vol. 62 | 2015년 7월

ISSUES & TRENDS

Changing Landscape of Private Rental Market in Korea 박미선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준

Developing Housing Finance Policy in a Changing Housing Market 박찬규

IN-DEPTH LOOK

2014 KRIHS Research Projects

GLOBAL PARTNERSHIP NEWS

Vol. 63 | 2015년 10월

ISSUES & TRENDS

Measures to Utilize Mobile Big Data for Spatial Policy 김중학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Activity-Based Simulation Model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ransportation Policy 이백진, 윤서연

The Application of Big Data in Transportation and the Need for Location Privacy Protection 윤서연

IN-DEPTH LOOK

Making a Nation Safe from Traffic Accidents 김준기

GLOBAL PARTNERSHIP NEWS

Vol. 64 | 2015년 12월

ISSUES & TRENDS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박세훈

Improving the Urban Living Environment for Senior Citizens 김선희

Transportation Policies in the Era of Aging 김준기

IN-DEPTH LOOK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Cities 이동우

GLOBAL PARTNERSHIP NEWS

2015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인 김동주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발행일 2016.9.30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대표)
팩 스 031-380-0470
eISBN 979-11-5898-123-5

www.krihs.re.kr

© 2016,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